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

2005. 7

**보 건 복 지 부**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05. 7

연구 기관 : 사단법인 환경분쟁연구소

연구책임자 :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연구 원 :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김선업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박수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자문위원 : 남정호 (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문미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박형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장 (강남대학교 교수)

함태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제 1 장 서론	7
1.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7
1.1 국립서울병원의 개요	
1.1.1 연혁	
1.1.2 현황	
1.1.3 기능	
1.2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추진 배경	
1.2.1 개요	
1.2.2 추진 배경	
1.2.3 병원 이전, 재건축 사업 추진 경과	
1.3 병원 재건축 사업의 기대효과	
2. 갈등영향분석의 추진 경위	10
3. 분석의 목적과 기대효과	10
4. 분석의 방법	11
5. 분석의 진행경과	14
5.1 연구용역 일정	
5.1.1 분석기간 : 2005. 4. 11 ~ 7. 10 (3개월)	
5.1.2 세부 일정	
5.2 진행 경과	
6. 이해관계자 현황	15
제 2 장 이해관계자 면담내용 요약	17
1. 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17
2. 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 및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18

3. 이전추진방법	21
4. 병원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22
5. 병원 부지 활용방안	23
6.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24
7.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26

## 제 3 장 쟁점 분석 및 대화 가능성 판단 29

### 1. 주요 쟁점과 분석 29

- 1.1 주요 쟁점 : 병원 이전과 재건축
- 1.2 하위쟁점
  - 1.2.1 병원과 지역사회의 관계
  - 1.2.2 이전 추진 과정에 대한 인식
  - 1.2.3 재건축 결정과정의 공론화/병원과 주민 간의 의사소통
  - 1.2.4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
  - 1.2.5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 및 지역 이미지
- 1.3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 가능성 판단
  - 1.3.1 병원과 지역사회의 대화 필요성
  - 1.3.2 현 상태의 변화 희망
  - 1.3.3 지역개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희망

### 2. 쟁점 해소 가능성 판단 37

- 2.1 병원이전을 둘러싼 갈등
- 2.2 병원 이전과 재건축의 쟁점 해소를 위한 3가지 대안
  - 2.2.1 병원이전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
  - 2.2.2 병원 재건축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
  - 2.2.3 병원 재건축과 지역발전의 상생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
- 2.3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소 방안에 의한 대화 가능성 판단

제 4 장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절차 설계	44
1. 참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44
2.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방식의 제안	45
3. 지역과 병원의 상생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의 기본설계	46
4. 중립적인 진행자의 필요성	47
5.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계획(안)	48
5.1 진행일정(안)	
5.2 참여자 선정(안)	
5.3 의제 선정(안)	
5.4 소요예산(안)	
6. 지역과 병원의 상생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의 기대효과	50

## 부록

1. 범구민대책추진위원회 홍보물	52
2. 국립서울병원 이전축구 결의문	55
3.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관련 자료	57
4.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사업 예산 설명자료	67
5. 이해관계자 면담 협조요청 공문	75
6. 이해관계자 면담 질문요지	77
7.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 요약	78
8. 면담한 이해관계자 명단	113

## 표 목차

[표 1] 병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18
[표 2] 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 및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20
[표 3] 병원 이전 추진방법	22

[표 4] 병원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23
[표 5] 병원 부지 활용방안	24
[표 6]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26
[표 7]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28
[표 8] 이해관계자들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	33
[표 9] 3 가지 갈등해소 대안의 비교	42
[표 10] 이해관계자 그룹별 이해관계와 갈등해소 방안	43
[표 11] 시나리오 워크숍의 구성과 운영	48

## 그림 목차

[그림 1] 시나리오 워크숍의 진행과정	45
[그림 2] 시나리오 워크숍의 참여구조	46

## 제 1 장 서론

### 1.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 1.1 국립서울병원의 개요

##### 1.1.1 연혁

- 1952.08.30 : 보건사회부 산하 노량진구호병원 설립
- 1961.08.14 : 국립정신병원 직제 공포
- 1961.11.28 : 노량진구호병원 인수 현(광진구 중곡동) 청사 준공(11,081㎡)
- 1962.02.01 : 개원(360병상)
- 1970.11.28 : 병동 증축(140병상)
- 1976.07.02 : 간호사 기숙사 신축(40침상)
- 1979.12.31 : 외래진료소 신축
- 1981.07.18 :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신설(대통령령 제10403호)
- 1982.07.22 : 신관 병동 증설(200병상)
- 1982.12.30 : 국립서울정신병원으로 개칭 (대통령령 제10966호)
- 1985.11.05 : 외래진료소 증축(320㎡)
- 1986.11.07 :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신축(745㎡)
- 1989.12.12 : 소아병동 증축(353㎡)
- 1990.12.27 : 외래진료소 증축(917㎡)
- 1994.10.10 : 남자 개방병동 개원
- 1996.03.20 : 소아자폐증진료소 개원, 여자 개방병동 개원
- 2002.05.06 : 국립서울병원으로 개칭(대통령령 제17597호)
- 2003.12.27 : 직제개정(정원 : 302명)
- 2004.06.12 : 기구개편 1개과 증설(정원 : 306명, 대통령령 제18394호)
- 2005.04.15 : 직제개정(정원 : 308명, 대통령령 제18786호)

##### 1.1.2 현황

- 면적 : 부지 13,854평 (본원+소아청소년진료소), 건평 9,299 평
- 종사인원 : 총 305명 (전문의 28명[공보의 2명 별도], 전공의 20명),
- 병상수 : 총 960병상

### 1.1.3 기능

#### 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 치료

- 정신질환자 개인 및 집단치료
- 약물요법
- 작업 및 예술 등 생활지도요법

#### 나.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 전공의
- 의과대학생
- 정신보건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양성
- 간호사 및 간호학생
- 임상심리학 및 의료사회사업 실습생

#### 다. 임상연구

- 정신의료영역의 조사연구
- 단독 및 공동 임상연구
- 마약중독 연구
- 알콜중독 연구

## 1.2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추진 배경

### 1.2.1 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4년간)
- 재건축 규모 : 700병상, 연건평 11,197평  
(중앙병동, 정신보건연구소, 기숙사 등)
- 소요예산 : 약 858억 원

### 1.2.2 추진 배경

-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1961년 건립된 이후 40여 년 동안 국립서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현대식 정신질환 진료를 위한 공간 부족



- 병원의 노후화는 전문 인력의 사기 및 인력수급에 부정적인 영향
-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열악한 치료환경
- 병원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가 주민들이 병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전국 정신병원의 선도기능과 정신보건 관련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1.2.3 병원 이전, 재건축 사업 추진 경과

- 1989. 4 : 병원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현부지에 건물의 신·증축으로 기능 및 시설 현대화 추진
- 1994. 12 : 지역주민들의 병원이전 요구 국회청원
- 1995. 3 : 병원이전 사업계획 수립
- 1995. 11 ~ 2002. 2 : 1차 이전추진
  - 서울시, 수도권 지역 50여개 후보지 모색,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나 무산
- 2003. 2 ~ 2003. 7 : 2차 이전추진
  - 병원시설 기부자 공모방식에 의한 이전사업을 추진기로 계획 변경
  - 2003년 3월 및 7월에 걸쳐 모두 2차에 걸친 공모추진결과, 병원이전을 반대하는 이전후보지역 주민의 반대와 유치 동의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무산
- 2003. 8 현 위치(중곡 3동) 병원 재건축 방침 결정

### 1.3 병원 재건축 사업의 기대효과

- 병원을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함으로써 국립병원의 위상과 상징성 제고
- 시설 현대화로 낙후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
- 정신보건 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의 중심기관으로 활용
- 시설 현대화로 환자와 환자가족은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 제공
- 건물과 시설의 현대화로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의 상징(landmark)으로서 주민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 주민친화적인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기능을 강화한 시범사례로 활용

## 2. 갈등영향분석의 추진 경위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범 사업으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던 중 중곡동 주민 300여명이 2005년 3월 14일 구청 강당에 모여 ‘국립서울병원(일명:정신병원) 이전을 촉구하는 범주민대책추진위원회(이하 ‘이전추진위’라 한다)’를 결성하고, 같은 달 29일 광진구 의회에서 병원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30일부터 광진구 전역에 이전촉구 현수막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이전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병원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라[부록 1, 2 참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확인하여, 바람직한 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갈등관리 제도의 하나인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갈등영향분석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복지부’라 한다)와 주민 어느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인 환경분쟁연구소에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 3. 분석의 목적과 기대효과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입장과 이해관계를 구분하고, 이해관계자들 의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확인하여,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갈등해소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으며,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병원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촉진
- 둘째, 이해관계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셋째, 사업내용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의 유포와 갈등의 확산 방지

넷째, 사업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협력 관계 조성

다섯째, 갈등유발 요인의 분석과 해소방안의 사전 설계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시행착오 예방

#### 4. 분석의 방법

갈등영향분석은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으로 부를 정도로 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주된 이해관계와 쟁점을 확인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해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바람직한 해소절차를 제안하는 기법이다.

면담 방법은 분석팀 2~4명이 이해관계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때에 따라서는 면담 대상 이해관계자 2명이 같이 나온 경우도 있고, 질문은 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되 내용에 따라 폐쇄형 질문을 보완했으며, 면담시간은 1회 평균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분석팀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의 5단계에 따라 병원 재건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관심사항들을 확인한 후, 대안별 갈등해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바람직한 갈등해소 절차를 제안했다

#### \* 갈등영향분석의 5 단계

##### ○ 1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 준비

- 1차 면담 대상자 선정(보건복지부 협조)
- 면담 협조요청 공문 발송(보건복지부 협조)
- 면담 일정 약속
- 질문내용 준비

##### \* 질문 내용

- 갈등의 발생 배경, 주요쟁점

-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대한 면담대상자의 의견
-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절차 참여의사 등

○ 2단계 : 이해관계자 면담

- 직접 방문 면담 : 많은 정보, 다양한 아이디어, 신뢰형성에 효과
- 1시간 ~ 2시간, 개방형 질문 중심으로 폐쇄형 질문 혼용
- 분석팀 합동 면담, 녹음기 사용 지양

\* 면담의 초점

- 갈등 상대방에 대한 면담대상자의 인식
- 갈등해결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들
- 면담대상자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의 소속집단과 연대관계
- 언론의 반응, 보도 내용 등에 대한 면담대상자의 생각
- 면담대상자의 조직 내 영향력
-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관심

○ 3단계 : 면담결과 분석

- 면담대상자 소속 집단별, 내용별 분류, 면담결과 요약
- 면담대상자 또는 소속 집단의 비밀 보장(비실명 인용)
- 이해관계자들 의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 의견차이가 있는 쟁점들에 대한 갈등해소 가능성 검토

\* 갈등해소 가능성 평가 요소

-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의 합의 가능성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절차 참여의사
- 대화 시한의 여유
- 대화 이외의 다른 해결 방법(소송, 시위, 로비 등)
- 대화절차의 중립성과 공정성
- 이해관계자들 간의 힘의 균형
- 대화절차 진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

○ 4단계 :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설계(필요한 경우)

- 대화 가능한 의제 선정

- 토론 가능한 쟁점 선정
- 대표자 선정(이해관계자 그룹별 공평 배분)
- 진행 일정표 작성(모임 회수, 간격, 기간)
- 쟁점 토의 순서
- 공동조사 일정(필요한 경우)
- 동일한 갈등으로 진행 중인 다른 절차와 중복, 충돌 관계(소송 등)
- 회의장소 임차료, 식대, 사실조사비, 진행자 보수 등 예산서 작성

**\*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 운영 기본규칙(안) 작성**

- 의사결정의 정의
- 참여자들(이해관계자, 진행자, 방청인 등)의 역할과 책임
- 참여자들 간의 교류 규칙(예 : caucus 운영 규칙)
-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작성, 배포 규칙
- 소위원회, 실무자회의 구성, 운영 규칙
- 보고서 초안의 배포, 검토 규칙
- 비밀 보장 규칙(절차 비공개외의 경우)

**○ 5단계 : 갈등영향분석서 초안 작성, 공람, 수정, 최종보고서 작성**

-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결과
- 갈등해소 절차 설계안의 요약
- 분석서 초안 공람, 면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결과 수정, 보완 후 최종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를 주관자(보건복지부)에게 제출

**\* 분석서에 답을 내용**

-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 갈등영향분석 착수 배경
- 분석의 목적, 방법, 진행경과
- 면담한 이해관계자 현황
-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과 관심사항 요약
- 이해관계자들 의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갈등해소절차 진행에 대한 분석자의 의견
- 필요한 경우 갈등해소 절차 설계안

## 5. 분석의 진행경과

### 5.1 연구용역 일정

5.1.1 분석기간 : 2005. 4. 11 ~ 7. 10 (3개월)

#### 5.1.2 세부 일정

국립서울병원에 관련재건추진 에따른갈등영향 분석및갈등 해소방안	구 분	추진 일정						비고
	연구 내용	D-90	D-80	D-60	D-40	D-30	D-10	
	이해관계자 협조공문 발송, 설문서 작성, 자문회의	—						
	1차 이해관계자 면담대상자 선정, 면담실시, 면담결과 정리		—	—				
	설문서 수정·보완, 자문회의		—	—				
	2차 이해관계자 면담대상자 선정, 면담실시, 면담결과 정리			—	—			
	면담결과 분석, 합의 가능성 판단, 합의절차 설계, 자문회의				—	—		
	보고서 초안 작성, 주관자, 이해관계자 공람					—	—	
	자문회의, 보고서 초안 수정·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	
	추진진도 (%)	10%	20%	30%	20%	10%	10%	

### 5.2 진행 경과

05.4.11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계약

4.14 보건복지부, 연구팀 합동회의

- 보건복지부 : 장동원 원장, 홍순철 과장, 천기선 사무관,  
정경덕 사무관

- 연구팀 : 신창현, 김광구, 김선업

- 이해관계자 면담 협조 공문, 면담대상 이해관계자 선정 등 협의

4.16 연구용역 착수계 제출, 연구진 1명 교체 통보

- 4.18 이해관계자 면담 협조요청 공문 발송(제1차)
- 4.22 ~ 5.26 이해관계자 방문 면담
- 5. 6 자문회의(1차)
  - 연구팀 : 신창현, 김선업, 박수선
  - 자문위원 : 남정호, 문미경, 김두환, 조승헌
- 5.23 보건복지부, 연구팀 합동회의
  - 보건복지부 : 이종구 국장, 장동원 원장, 조남권 과장, 천기선 사무관, 정경덕 사무관
  - 연구팀 : 신창현, 김선업, 김광구, 박수선
- 6.24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2차), 중간보고서 제출
- 6.27 ~ 7.8 분석서 초안 이해관계자 공람, 의견 접수, 수정·보완
- 7.11 최종보고서 제출

### 분석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접수결과

- 팩스, 이메일 접수 : 4건  
(이전추진위 1명, 주민 1명, 환자가족 1명, 보건복지부 5명)
- 전화 접수 : 3명(이전추진위, 주민, 전문가)
- 수정보완 의견 없음 : 31 명
- 기타 : 통화 불가능, 병가, 해외출장 등 3명
- 수정·보완 : 면담내용 추가, 자구 수정 등 대부분 의견을 반영했으나 연구진의 관점과 다른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음

## 6. 이해관계자 현황

면담 대상 이해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1차 면담 대상자 30명을 선정한 후, 1차 면담과정에서 추천받은 이해관계자들 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15명을 2차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팀이 면담한 45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주민 여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보다 병원 재

건축 사업으로 영향을 받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소수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생각이 병원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들을 확인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그룹은 이전추진위(구의원, 시의원), 주민(직능단체 대표 등), 광진구(관계 공무원), 정당인(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가족(환자가족), 보건복지부(관계 공무원), 전문가(정신보건의료 종사자, 연구자), 기타(사업자, 시민단체, 정보과 형사) 등 8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주민 중 직능단체 대표들은 이전추진위의 당연직 운영위원들이기 때문에 이전추진위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전추진위를 주도하는 의원들과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으로 분류했다. 면담한 이해관계자 숫자는 다음과 같다.

면담한 이해관계자 숫자	
이해관계자 그룹	이해관계자 숫자
이전추진위	6
주민	15
광진구	4
정당인	4
가족	2
보건복지부	5
전문가	5
기타	4
<b>계</b>	<b>45</b>



## 제 2 장 이해관계자 면담내용 요약

### 1. 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 국립서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전철역 엘리베이터 부지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중학교, 체육관 부지 협조를 요청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갔다', '주차장 개방, 어린이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폐쇄적이다, 교도소 같다', '광진구 주민들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다', '동네 슈퍼마켓 보다 도움이 안 된다', '이전요구 현수막 걸면 저러다 말겠지, 지치면 그만 두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립'자에 붙어있는 불친절이 아직 존재 한다' 등 병원이 지역사회에 무관심하고 주민을 무시한다는 의견이 10건이었고,
- '병원 직원들은 이전을 싫어한다', '아이들 교육문제 등으로 서울에 있기를 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의지가 있지만 병원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갈 생각이 없다, 이전 공모해도 안 되는 조건만 제시했다', '도지사의 유치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다', '민간사업자 공모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 등 주민들의 이전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전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전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의견도 10건 이었다
-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와서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병원장 얼굴 한 번 못봤다', '전화해도 응답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속을 모르겠다', '행정이 너무 불투명하다, 얘기해 주지 않는다' 등 병원과 주민 간의 의사소통 부족에 대한 의견이 6건으로 그 다음이고,
- '병원은 신뢰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신뢰하는 편이다' 등의 의견도 4건이 었다. 이상의 의견들을 다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표 1] 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1. 병원과 지역사회의 관계(10건)
  - 중곡 전철역 엘리베이터 부지 협조 거부
  - 중학교, 체육관 부지 협조 거부
  - 주차장 개방, 어린이집 약속 불이행
  - 광진구민과 상관없는 시설
  - 슈퍼마켓보다 도움이 안 되는 시설
  - '국립'자에 붙어있는 불친절
2. 병원의 이전노력에 대한 인식(10건)
  - 병원 직원들 이전 기피
  - 도지사의 동의서 요구
  - 공모절차 불공정
  - 무리한 이전 조건 (서울 근교, 대중교통)
3. 병원과 지역사회의 의사소통(6건)
  - 주민의견을 들어보려 하지 않음
  - 전화해도 응답이 없음
  - 설명해 주지 않음
4. 기타(4건)
  - 병원은 불신, 보건복지부는 신뢰
  - 무사안일, 보건복지부동

## 2. 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 및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 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다', '중곡동은 낙후지역이라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 '병원이 있으면 역세권 개발이 어렵다', '병원 때문에 뉴타운 지정이 안 됐다', '서울시는 병원을 이전하면 뉴타운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병원이 지가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자양동은 평당 2천만원인데 중곡동은 도로변이 8백만원이다',

'답십리, 장안평이나 건국대 아래쪽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됐다는 박탈감이 있다', '법원이 송파구로 이전한다면 병원도 같이 가야 한다' 등 병원이 지역발전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 '환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히죽히죽 웃으면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통원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불안할 것이다', '정신병원이라는 이미지가 문제다. 주변에 개인 정신병원도 많은데 가끔 소란도 있다', '중곡동에 산다고 얘기하면 정신병원 있는 곳 아니냐고 물어본다', '택시를 타도 정신병원 쪽으로 가자고 얘기해야 한다', '협오시설 이미지가 강해 전세나 가게 등이 나가지 않는다' 등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12건으로 다음이었고, 병원 이전 요구는 선거용이라는 의견도 10건이었다.

■ 이어서 '병원 부지가 넓으니까 병원이 나가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다', '중곡동에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멀리 통학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 대형 할인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 등 학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병원 부지(약 1만4천 평)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6건이었고,

■ '병원도 공기 좋고 조용한 데로 가면 좋을 것이다', '도시화되면서 병원 주변 환경이 나빠졌으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다. 정신질환자들은 공해가 치명적이다'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6건이었다

■ 이에 대해 이전을 반대하는 환자 가족이나 병원 측은 '아이가 4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이 됐다. 전에는 서울에서 사라진 애가 인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달리는 차로 뛰어든 적도 있다. 이제는 밖에 나갔다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다', '국립병원이라 비용이 저렴하다', '정신보건 정책이 격리수용에서 재활복귀로 바뀌었다. 용인 산골짜기에 부지가 있지만 그곳에는 대형 민간 정신병원이 있고 재활복귀 정책과 맞지 않아 백지화했다', '적절한 부지가 나와도 이제는 가기 어렵다', '정신질환은 맑은 공기보다 사회가 치료하는 것이다', '일반환자들은 도시에 있고 정신질환자들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이다', '부동산 업자들이 병원 이전하면 땅값, 집값이 오르니까 오르기 전에 사두라고 얘기한다', '병원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지역개발이 가능하다' 등 비용저렴,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병원이 있어도 지역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도 10건이었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병원이전을 요구하는 이유 및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1. 지역발전의 걸림돌(31건)
  - 역세권 개발 불가능
  - 뉴타운 개발 불가능
  - 지가 하락 요인
  -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소외감
2.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12건)
  - 고정관념
  - 환자들의 왕래
  - 개인 정신병원 밀집
  - 정서적 열등감
3. 선거용(10건)
4. 학교 등 편의시설 부지 필요(6건)
5. 이전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6건)
  - 노후 시설 현대화
  - 대기오염
6. 이전 반대 이유(10건)
  - 진료비용 저렴
  -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 부동산 투기 수단
  - 병원과 지역개발 공존 가능

### 3. 이전추진방법

- 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전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움직여야 하는데 구의원은 힘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병원이 이전 의지만 있다면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전의지가 없으면 주민궐기대회를 열 생각이다', '시위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이전 의지를 보이게 해야 한다',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주민 2만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주민들은 서명 받고 시위하는 것 말고 뽕족한 수단이 없다' 등 집단시위나 서명운동을 통해 이전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 '민간공모 절차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공모절차를 한 번 더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이 있다', '받아줄 곳 설득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하면 된다', '민간사업 공모방식의 장점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하면 그들이 열심히 추진할 것이다' 등 민간사업 공모방식을 다시 한 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건이었고
- '국회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설득해서 재건축 방침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도 못하는데 주민이 무슨 힘이 있나',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야 된다' 등 국회의원과 집권당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5건이었다
- 이밖에 '정신병원 유치지역 주민지원법안을 만들었다가 법제처가 모든 혐오 시설에 일반화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그린벨트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광진구 긴고랑 지역으로 이전하면 된다' 등의 의견들도 5건이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표 3] 병원 이전 추진 방법

1. 이전촉구 시위 및 서명 운동(11건)
2. 민간사업 공모방식 재 추진(6건)
3. 국회의원과 집권당의 노력(5건)
4. 기타(5건)
  - 정신병원 유치지역 주민지원법 제정
  - 그린벨트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포함
  - 광진구 긴고량지역 이전

## 4. 병원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 병원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은데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겠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이전요구 서명 여러 번 했지만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너무 늦었다. 전에는 이전예산을 확보하여 이전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 '서울 근교에는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산골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전부지 공모를 한 번 더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해봐야 안 될 게 뻔하다', '10년 넘게 이전을 추진해 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병원이 남양주, 하남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접대용 답변이지 진심이 아니다' 등 이전 가능성에 비관적인 의견은 15건 이었고

■ '남양주시 같은데 종합병원으로 포장해서 가면 받아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 근교에 오라는 지역이 있고 조건도 좋다. 알려주면 병원이 방해공작 할까봐 알려줄 수 없다', '전에는 이전할 데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전할 곳이 있는 것 같다', '정신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바꾸고 노인 복지시설까지 추가하면 오라는 곳이 많다', '이전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생각이 그렇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등 이전 가능성에 낙관적인 의견은

9건이었다.

-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힘이 없어서 못 옮기는 건지 이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양주시는 놓고 있는 땅이 아주 많다. 내가 남양주 시장이라면 인센티브 많이 받아서 수용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붙여 보겠다', '광진구에서 이전부지를 제공하면 이전이 가능하다' 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병원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1. 비관적인 의견(15건)
  - 병원을 받아 줄 지역이 없음
  - 이전예산이 없음
  - 10년 넘게 추진했으나 실패했음
  - 보건복지부의 이전의지가 없음
2. 낙관적인 의견(9건)
  - 종합병원으로 이전하면 가능
  - 보건복지부의 이전의지가 있음
  - 유치희망 지역 있음
  - 그린벨트 해제하면 가능

## 5. 병원 부지 활용방안

- 1만4천 여 평의 병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 고층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뉴타운 등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2건으로 다음이었다.
- 이어서 공원과 주민이용 스포츠 센터, 문화 공간 등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건이었고

■ 대형할인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건이었다

■ 이밖에 '뉴타운 개발하면 서민들은 변두리로 밀려난다',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다' 등 뉴타운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2건 있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병원 부지 활용 방안
1. 학교(13건)
2. 고층아파트(12건)
3. 공원(5건)
4. 문화.체육시설(5건)
5. 대형할인점(3건)

## 6.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때까지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 후보들이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기하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화 희망하지만 주민들이 말발이 딸려 대등한 대화가 잘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결단이 중요하다. 병원장과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치인들이 지역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빠지는 대화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전의지가 없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주민공청회 통해서 여론 확인이 우선이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가족들이 뭘 어떻게 하나', '재건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대화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재건축 예산을 확보한 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땅값 생각만 하는 사람들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재건축을 전제로 양보 카드를 찾아볼 필요는 있다', 등 재건축을 원하는 보건복지부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 간의 대화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가능하지 않거나 필요없다는 의견이 11건이었고

-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화가 없으니까 유언비어가 돌고 억측이 구구하다. 이전을 전제로 하면 보건복지부가 응하기 어려울 테니까 국립서울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면 좋겠다', '조속히 재건축 추진 정책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 때문에 대화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화는 주민단체 대표들이 하는 게 낫다. 한 동에 5명 정도씩 하면 된다', '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기획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한 번 만나서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 '병원 재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병원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다', '서로 멀리서 돌팔매질만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만나야 뭐가 나올 거 아니냐' 등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0건이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 1. 부정적 의견(11건)
  - 지방선거 전에는 불가능
  - 대화보다 보건복지부 의지가 중요
  - 주민여론 확인 우선
  - 재건축 전제 대화만 가능
  
- 2. 긍정적 의견(10건)
  - 재건축, 이전의 전제 없이 대화
  - 주민단체 대표가 대화
  - 병원과 주민 협의체 구성

## 7.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 이전과 재건축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 안되면 포장을 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재건축을 하려면 한 60층 정도로 지어야 한다', '이전이 불가능하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20~30층 현대식 시설로 국립종합병원으로 하면 좋겠다', '정신과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암센터, 치매병원 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의료시설로 발전해야 한다', '국립의료원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립의료원을 정신병원과 통합해서 중곡동에 재건축하는 방안도 있다', '일산의 국립암센터처럼 임상과 연구 두 축으로 가칭 "국립정신보건센터"를 검토 중이다', '교육. 연구 기능으로 전환은 부정적 이미지에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물들의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꾸려고 한다' 등 종합병원 형태나 국립의료원과 통합, 치매병원, 국립정신보건센터, 교육. 연구 기능 전환과 고층빌딩 설계, 아름다운 디자인 등 정신병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방안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은 '뉴타운 등 이전효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병원을 포함한 중곡3동 재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광진구는 병원의 용적율을 완화해서 고층으로 짓도록 해주고, 병원은 2천평 정도 부지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중. 고등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타협하는 방안도 있다', '학교부지로 1,600평 정도를 주민들에게 제

공하고 강당을 신축해서 주민을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려고 한다', '잔디 축구장과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이다', '주차장도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치매노인 병동을 신축해서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치매, 왕따 어린이와 가족 상담, 이혼상담 등 지역주민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당, 청소 용역을 지역 주민들이 하도록 한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 학교부지 제공, 편의시설 개방, 치매, 왕따 어린이 상담 등 지역주민용 프로그램 운영 등 병원과 지역발전의 적극적인 연계, 기여방안이 11건이었다.

■ '병원과 주민편의시설(공원 등)은 공존하기 어렵다. 화양변전소도 지중화한다', '병원의 진료기능을 교육, 연구 기능으로 변화하는 시도는 정신병원이 입지하고 있는 한 반대할 것이다', '민간사업자 방식에 의한 이전 공모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부지를 공모하여 1년 후에도 신청지역이 없으면 그때는 재건축에 승복하기로 주민과 합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다시 한 번 하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공모지역이 없으면 재건축에 승복하겠다', '선 공모, 후 재건축에 개인적으로는 승복해야 한다고 본다' 등 계속 이전을 추진하거나 민간사업 공모절차를 공정하게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재건축에 승복하는 방안이 9건이었다.

■ 이밖에 '협상 전문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1. 병원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17건)
  - 종합병원 형태
  - 국립의료원과 통합
  - 치매병원 포함
  - 국립정신보건센터
  - 교육·연구 기능으로 전환
  - 고층빌딩 디자인
2. 병원의 지역발전 기여 방안 모색(11건)
  - 재건축과 지역개발 연계
  - 학교 부지 제공
  - 체육·문화시설 등 신축 및 개방
  - 치매상담 등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3. 이전 추진(9건)
  - 계속 이전 추진
  - 민간사업 공모방식 재추진
  - 선 공모, 후 재건축 승복

## 제 3 장 쟁점 분석 및 대화 가능성 판단

45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면담한 내용들을 토대로 병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정리해 본 결과 하나의 주요 쟁점과 5개의 갈등유발 요인이 도출되었다.

### 1. 주요 쟁점과 분석

#### 1.1 주요 쟁점 : 병원 이전과 재건축

병원의 재건축 또는 이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과 보건복지부 간에 충돌하는 주요 쟁점은 '병원 이전'과 '병원 재건축'으로 정리했다.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등은 이전을 요구하는 입장인 반면에 가족, 보건복지부, 전문가, 기타 등은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은 병원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병원이 차지하고 있던 1만4천여 평의 넓은 토지는 학교, 고층아파트, 공원, 문화, 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1961년에 건립한 병원은 수도권외 정신보건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근교로 이전,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신병원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이전노력을 중단하고, 2003년 8월 병원 재건축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현 위치의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4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 위치 재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삭감된 것을 계기로 병원 재건축 추진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동안 잠재하고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어, 2005년 3월 14일 광진구 의회 의원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립서울병원(일명;정신병원) 이전을 촉구하는 범주민대책추진위원회(이하 '이전추진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10,798 명의 서명을 받아 2005년 5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 1.2 하위쟁점

### 1.2.1 병원과 지역사회의 관계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등은 지난 40여 년 동안 병원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중곡 전철역 엘리베이터 부지 협조 거부, 중학교·체육관 부지 협조 거부, 주차장 개방·어린이집 약속 불이행 등 지역사회에 대해 무관심하며 주민들을 무시한다고 불신하고 있다.

또한 1만4천여 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있지도 않는, 지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 수퍼마켓보다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이러한 불신이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병원이 이전하면 지역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반면에 병원에서는 개원 이후 많은 대지를 지자체에 내주었으며, 특히 병원 앞의 도로부지, 중광초교 부지, 중곡역 출구부지 등을 제공했으며, 소아자폐증 진료소 개원 시 주민과 약속했던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나 이용자가 없어 2003년 폐쇄하였고, 주차장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병원측은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1.2.2 이전 추진 과정에 대한 인식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등은 병원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이전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대상지역 시장·군수의 유치동의서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동의서까지 과도하게 요구하여 무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 근교에 4만여 평의 넓은 부지와 대중교통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지를 이전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더욱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등 이전추진과정이 형식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주민측은 병원 직원들이 처음부터 이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 병원은 직원들이 반대해서 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추진했다는 의견에 대해 병원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특

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전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사표명을 할 위치도 아니고, 한 적도 없다고 한다. 이전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1995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서울시 및 수도권 인접지역 50여개 후보지를 물색,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2003년 2월 병원시설 기부자 공모방식에 의한 이전사업을 추진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2003년 3월과 7월에 2차에 걸쳐 공모를 추진했으나 이전 후보지의 병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공모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유치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해서 무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1.2.3 재건축 결정과정의 공론화/병원과 주민 간의 의사소통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등은 40년이 넘게 지역에 있었지만 병원과 주민 간의 친목행사 한 번 가진 적이 없고, 전화해도 응답이 없으며, 이전계획을 철회했으면 이전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재건축 방침으로 바뀐 사실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쉬쉬하며 재건축 설계용역 예산을 국회에 상정한 것 등 병원과 주민 간의 대화가 단절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병원측은 갈등 표출을 우려하여 재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없었으며 재건축 예산을 확보한 후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여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대화가 부족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편이다.

### 1.2.4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등은 병원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어렵고, 뉴타운 개발 신청도 반려되었다는 좌절감, 토지와 주택 등 재산가치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박탈감,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가장 잘 된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개발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소외감 등을 갖고 있고, 주택가 한 복판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만 없으면 학교,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데 병원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갖고 있다.

병원측은 지역의 상대적 낙후의 원인이 병원의 입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주

거지역의 용도 이용이 전용주택지로 지정된 데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병원, 가족, 전문가 등은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지역발전과 병원이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1.2.5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 및 지역 이미지

이전추진위, 주민측은 도심에 위치하는 것보다 물 좋고 조용하고 쾌적한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치료에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병원, 전문가 등은 “정신질환 치료는 맑은 공기나 좋은 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치료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더불어 살며 재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접근성이 좋고, 지역사회 내 도심지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등은 정신병원이 갖고 있는 혐오시설의 이미지가 사회의 편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병원 주변에 몰려 있는 개인 정신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소란을 목격하는 등 아이들 보기 민망한 광경들이 이따금 발생하고, 무엇보다 중곡동 산다고 하면 정신병원 있는 데냐고 되묻는 것이나, 택시를 타면 정신병원 쪽으로 가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 등의 정서적 피해의식도 갖고 있다.

반면에 가족, 보건복지부, 전문가, 기타 등은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해는 하지만, 병원 재건축 등 현대화 사업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표8 다른 파일(매트릭스 수정)에서 따옴 2쪽



### 1.3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 가능성 판단

앞에서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표면화된 쟁점과 하위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기초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우선 정리한다.

#### 1.3.1 병원과 지역사회 대화 필요성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의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면담 내용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가 병원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건축 방침을 결정한 사실,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이유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서울 근교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보건 정책이 격리수용에서 재활복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서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등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광진구 공무원과 지역구 의원 등을 만나 재건축 방침을 설명한 것과 병원 홈페이지에 재건축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한 것 외에 보건복지부가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재건축 방침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론화 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대다수 주민들은 아직도 보건복지부가 병원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1961년 병원 건립 이후 병원과 지역사회(중곡동)는 협력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건립시부터 광진구에 부지를 제공해왔고, 이후에도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병원 주변 환경의 변화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주민 요구에 의한 이전 추진과정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해 병원측의 이전 노력은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정보의 교류나 대화가 거의 없었던 그간의 관계는 병원이 그 동안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신보건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그 안에서 국립서울병원의 역할이 어떠한지 등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여, 주민들이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아가 주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 무심과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불신이 직접 대화보다 서명운동이나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한 정치적 압력 수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병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부족은 오해와 서로간의 불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다. 또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병원재건축 관련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동안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치인들은 지난 번 선거에서 병원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약위반으로 상대 후보에게 공격받을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 대화에 부정적인 반면에, 10년 넘게 끌어온 병원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1.3.2 현 상태의 변화 희망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의 변화를 원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보건복지부는 노후건물 등 열악한 진료환경을 현대식 시설로 바꾸고, 재활복귀 중심의 진료체제 개편과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중심 기관으로 변화를 원하며,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등은 지역개발을 통한 재산권 보호, 생활환경 개선, 혐오시설 이미지 제거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

이해관계자들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는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고 현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1.3.3 지역개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희망

이해관계자들의 또 하나의 공감대는 이전이나 재건축이나를 떠나서 모두 현재의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보다 나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현재의 삶보다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나 환자들, 이전추진위 등 이해관계자들은 수단(이전, 재건축)은 다르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의 발전과 함께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이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직접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과 개인의 재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삶이다.

병원측은 재건축을 통해 열악한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장기적 정신보건정책의 추구가 가능한 국립병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지역발전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의식은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의제로 설정 가능할 것이며, 대화를 통하여 재건축이나 이전이나의 입장 중심이 아니라 그 주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2. 쟁점 해소 가능성 판단

이상의 주요 쟁점과 하위 쟁점 요인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토대로 3가지 해소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1 병원이전을 둘러싼 갈등

1995년부터 2003년 7월까지 병원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사업자 공모방

식에 의해 이전을 추진해 봤으나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전지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현 위치 재건축으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 병원이전 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전지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서울과 좀 더 멀리 떨어져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격리된 지역도 이전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시·도지사의 동의서는 철회하는 등 이전조건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 정책이 격리수용에서 재활복귀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래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통원 진료할 수 있도록 서울근교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 용이성이 중요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일반 환자의 인권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서울병원은 수도권 주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현 위치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2 병원 이전과 재건축의 쟁점 해소를 위한 3가지 대안

병원 이전과 재건축의 갈등해소를 위한 첫 번째 대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재건축하고, 병원이 이전한 자리에 뉴타운, 학교, 공원 등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전지역이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서울 근교이어야 하고 둘째, 4만여 평의 넓은 부지가 있어야 하며 셋째, 이전지역 시장·군수와 시·도지사의 도시계획 변경승인 동의서 등 3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안은 현 위치에 당초 계획대로 병원을 재건축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현 위치에서 중앙병동과 정신보건연구소 등 연건평 1만1천여 평에 700 병상 규모로 858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병원을 재건축하는데 공사기간은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우선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기획예

산처로부터 따낸 후, 2004년도 정기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년만 더 이전을 추진해 보자는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로 삭감된 바 있고, 2005년도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 대안은 보건복지부 주장대로 병원 이전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 재건축 사업도 또 다시 예산이 삭감되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의 내용들을 병원 재건축 사업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타협안이다.

### 2.2.1 병원이전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

주민들은 병원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전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이전촉구 청원서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하여 2003년 8월에 확정된 재건축 방침을 철회하고 다시 이전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를 움직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바꾸는 것 등을 이전 추진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건축 방침을 철회하거나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주민들이 너무 무리하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이전조건과 같이 대중교통의 접근 용이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을 주민과 격리된 서울 근교 지역(용인)에 보건복지부가 소유하고 있는 병원부지가 이미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정책이 정신질환자들을 산골짜기의 쾌적한(?) 환경에 격리수용하는 방식에서 가족과 함께 사회가 치료하는 재활복귀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국 234개 시·군·구 보건소와 지역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새로운 정신보건 정책에서 병원 재건축은 단순한 정신질환자 진료시설의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보건연구와 정신보건 종사자 교육·훈련의 중추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900 베드인 현재의 병상 수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병원을 이전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이전을 통해 지역발전과 병원 재건축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의 재추진,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국회의원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의 결단 등 이전추진위가 벌이고 있는 활동들이 모두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이전에 의한 갈등해소의 대안은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2.2.2 병원 재건축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1961년에 건립한 시설이라 낡고 협소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연구소 등 정신보건 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1989년에 병원 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조건에 적합한 희망지역이 없어,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현 위치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재건축 사업의 주요 내용은 858억 원의 예산으로 700 병상의 중앙진료병동을 비롯하여 외래진료소, 정신보건연구소, 양성소, 기숙사, 강당 등 연건평 1만1천여 평의 건물과 2천 평의 조경, 운동장 등을 4년 동안 신·증축하는 것이다.

\* 병원 재건축 사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4] 참조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858억 원을 들여 재건축하면 현재의 낡은 시설에 비해 외관이 깨끗해지는 등 지금보다는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의 개선만으로는 병원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도 미흡하고, 그 동안 소원했던 병원과 지역사회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데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 재건축에 의한 갈등해소 방안도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2.2.3 병원 재건축과 지역발전의 상생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

병원 재건축과 지역발전 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이해관계를 모두 수용한 제3의 대안으로 병원 재건축과 지역발전의 상생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병원 부지 활용방안으로 주민들은 학교, 고층 아파트,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이 중곡 3동에 들어서면 토지와 주택 등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나아질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지는 데 따른 박탈감, 소외감과 정신병원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지역적 열등감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부지 활용을 위한 병원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병원은 종합병원 형태의 고층빌딩으로 재건축하여 정신병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병원 재건축과 뉴타운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개발 효과를 달성하며, 병원 부지 일부를 중·고등학교와 공원, 문화·체육 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진구와 서울시가 협조하여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가 바라는 대로 현 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발전의 효과를 달성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상생의 대안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이 다른 두 가지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3 가지 대안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3 가지 갈등해소 대안의 비교

	제1안: 병원이전	제2안: 재건축	제3안: 재건축+지역발전
누가	이전추진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광진구, 서울시
	주민, 광진구, 정당인	전문가	주민, 정당인, 전문가
무엇을	지역발전	병원 재건축	지역과 병원의 공존
어떻게	집회, 시위	국회예산 승인	대화와 타협
	서명운동	행정절차	참여적 의사결정
	정치적 해결	법대로 집행	정치와 행정의 조화
해결가능성	낮음	낮음	높음
왜	정책변화	주민반대	상생의 대안
우선순위	3	2	1

### 2.3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소 방안에 의한 대화 가능성 판단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갈등해소 방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이전추진위는 민간사업 공모 재추진, 선 이전공모 후 재건축 논의 등 여전히 이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갈등해소방안은 그 동안 견지해온 이전 입장과 충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거에 나가지 않는 주민과 광진구 등은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이전효과에 준하는 지역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연계 추진, 종합병원 형태의 고층빌딩 재건축, 학교·문화·체육 시설 부지 활용 등을 차선택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등도 지역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과 병원 모두 한 발씩 양보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룹별 이해관계와 갈등해소 방안을 다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이해관계자 그룹별 이해관계와 갈등해소 방안

	입장	이해관계	갈등해소방안
이전 추진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li> <li>○ 재산권보호</li> <li>○ 이미지개선</li> <li>○ 학교 등 공공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 공모 재추진</li> <li>○ 선 이전추진 후 재건축논의</li> </ul>
주민	이전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차선택</li> <li>○ 재건축과 지역개발연계</li> <li>○ 종합병원 형태의 고층빌딩 건축</li> <li>○ 학교·문화·체육 시설 부지 제공</li> </ul>
광진구	이전	상동	상동
정당인	이전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 이전 공모, 후 재건축 승복</li> <li>○ 재건축과 지역개발연계</li> <li>○ 종합병원 형태의 고층빌딩 건축</li> <li>○ 학교·문화·체육시설 부지 제공</li> </ul>
가족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용 저렴</li> <li>○ 접근 용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해결</li> </ul>
보건 복지부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환자진료</li> <li>○ 병원 현대화</li> <li>○ 재활복귀, 연구·교육 중심</li> <li>○ 광진구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부지 제공</li> <li>○ 문화·체육 시설 신축, 개방</li> <li>○ 치과, 내과 등 주민 진료기능 추가</li> <li>○ 현대식 건축 디자인</li> </ul>
전문가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현대화</li> <li>○ 지역과 공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문화·체육 시설 부지 제공</li> <li>○ 치과, 내과 등 주민 진료기능 추가</li> <li>○ 주민 고용 등 지역사회 기여</li> </ul>
기타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현대화</li> <li>○ 지역과 공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문화·체육 시설 부지 제공</li> <li>○ 치과, 내과 등 주민 진료기능 추가</li> <li>○ 병원 재건축과 지역개발 연계</li> </ul>

## 제 4 장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절차 설계

갈등과 불신은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다. 특히 정부와 주민 간의 공공갈등은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병원 이전 또는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해소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간의 신뢰회복 방안이기도 하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합리성과 함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고, 보건복지부와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 1. 참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지역발전과 병원 재건축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해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은 지역개발 계획과 병원 재건축 계획을 통합하여 지역과 병원이 상생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보건복지부나 주민, 광진구, 서울시 등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모두 힘을 합해야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병원 재건축 계획과 뉴타운 계획을 통합한 병원지역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계획 주관자인 광진구와 승인권자인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용적률과 고도제한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을 재건축하는 대신 부지의 일부를 주민들이 필요한 학교, 공원,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양여하기 위해서는 병원 재건축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개발 방식에 대해 토지,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전체 주민의 60%가 넘는 세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 없이 병원 재건축과 지역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반발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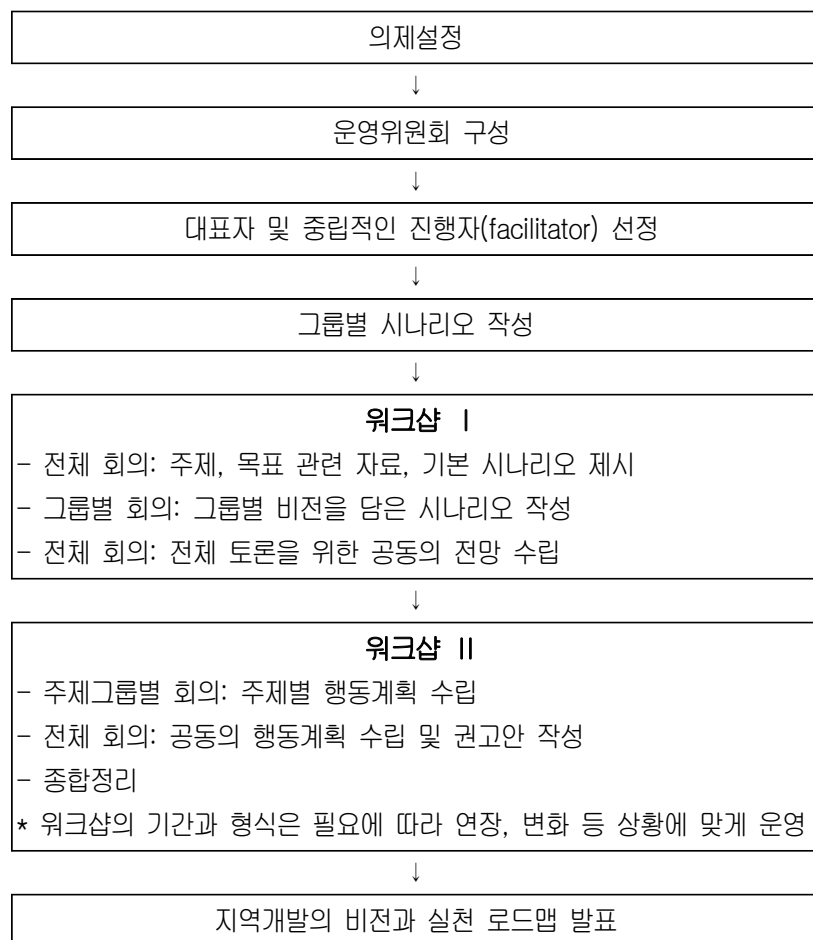
과거에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하면 재경부,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서울시, 광진구 등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민주화, 지방화 시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정책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식으로는 수직적인 조정기능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찾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방식의 제안

이 방식은 지역개발의 비전과 실행 로드맵에 관해 주민, 정부, 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대안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안 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며,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비전과 방식, 로드맵에 합의하여 추진하는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이다.[그림 1]

[그림 1]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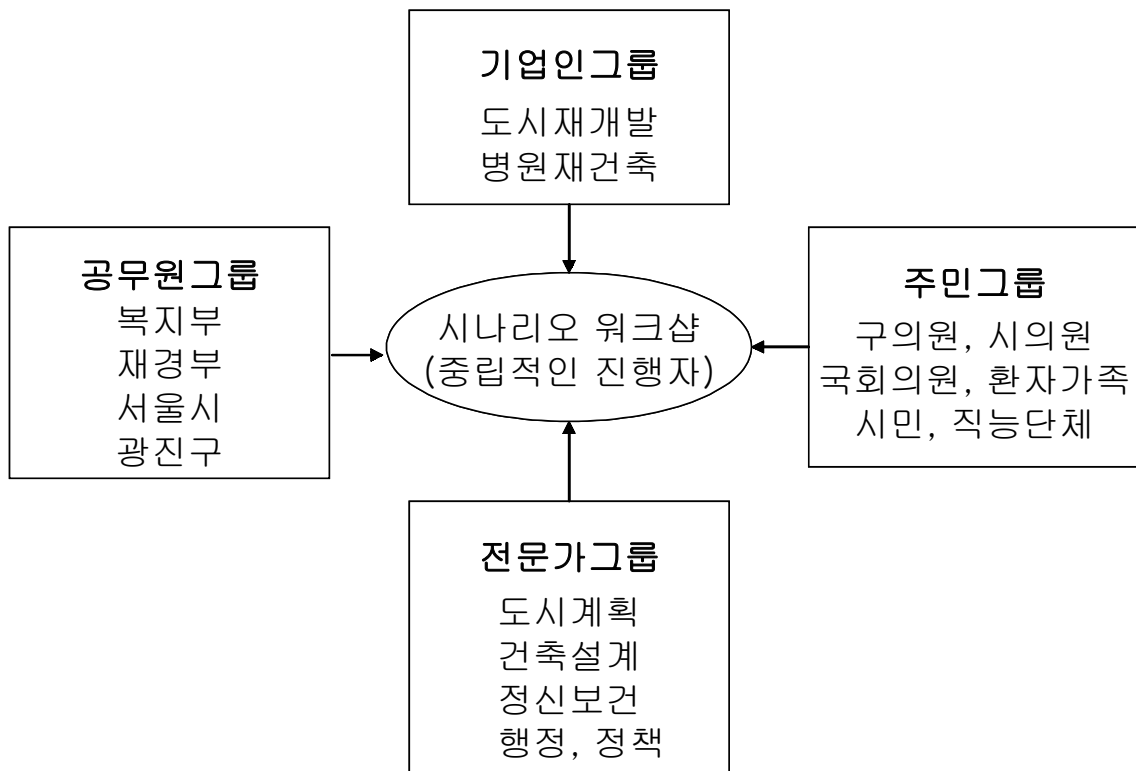


### 3. 지역과 병원의 상생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의 기본설계

시나리오 워크숍은 주로 지역적 수준의 발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사회적 합의절차의 하나다. 워크숍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역발전과 병원 재건축을 둘러싸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사회적, 기술적, 조직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4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첫째, 보건복지부, 광진구, 서울시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결정자 그룹과 둘째, 도시계획, 건축설계, 정신보건, 정책·행정 등 전문가 그룹 셋째, 병원 재건축과 도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 그룹 넷째,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환자가족, 시민·직능단체 등 주민대표 그룹이 참여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나리오 워크숍의 참여구조



참가자들은 의제가 되고 있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각자 자신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공유하지 못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여, 합의 가능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정부, 이해관계자 집단 및 전문가 사이의 대화이며,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현행 법 제도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행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주민이 병원 재건축과 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입안과정부터 참여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적인 대화로 갈등을 예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 4. 중립적인 진행자의 필요성

병원의 이전과 재건축은 겉으로 보기에 양립이 불가능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전과 재건축을 주장하는 내면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대화의 문이 열리고, 병원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주민참여 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주민 어느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적인 진행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진행자는 중립적 위치에서 서로 불신하는 참여자들이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고, 입장과 이해관계를 구분하며, 충분히 얘기하고 들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회의진행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적대적인 토론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함께 협력하여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표 11] 시나리오 워크숍의 구성과 운영

목적	(1) 지방 또는 지역 수준에서 미래의 기술적 필요와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을 수립 (2)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 작성 (3)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	
적용 영역	지리적 영역	보통 인구 10만 정도의 중소도시
	책부문영역	다양한 유형의 기술에 대한 평가와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고, 폭넓고 사회성이 강한 주제를 갖는 정책영역(예, 지역개발 정책)
구성	주최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또는 중앙정부와 국회
	운영위원회	·구성: 주최기관에서 4개 그룹별 대표자 5, 6인 정도로 구성 ·운영원칙: 구성된 이후에는 주최기관에 대해 독립성 유지 ·역할: 워크숍의 진행 일정, 진행 방법, 진행 관리, 참가자 초청 및 결정 등
	진행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역할: 전체세션 사회 및 진행 책임, 원활한 토론 진행 ·자격: 갈등관리 전문가, 전문 사회자
	역할그룹 참가자	·주민(정치인, 주안직능단체 대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기업, 전문가의 4개 그룹으로 구성 하고, 각 그룹별 구성원은 4-6인 정도 ·구성: 각 역할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
진행	소요기간	·통상 이틀간 진행
	워크숍 이전	·시나리오 작성(운영위원회)
	워크숍 I	1) 전체 open 세션: 워크숍 목표 소개, 이슈와 관련된 정보 제공 2) 그룹별 회의: 4개 그룹별로 각자의 시나리오 작성 3) 전체 회의: 그룹별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하나의 시나리오 작성
	워크숍 II	1) 주제그룹 회의: 그룹을 섞어서 4개 정도의 주제그룹 구성, 주제별 행동계획 작성 2) 전체 회의: 주제별 비전의 종합, 우선순위 선정, 실행계획 수립 * 워크숍의 기간과 형식은 필요에 따라 연장, 변화 등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
	워크숍 이후	1) 시나리오 및 행동계획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 2) 공청회 등을 통해 워크숍 결과를 대중적으로 공포, 토론
특징	·이해관계자들의 그룹별 대표성 유지 ·비전과 로드맵 수립이 주요 목적	
참고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a href="http://www.tekno.dk/">http://www.tekno.dk/</a> <유럽 시나리오 워크숍> <a href="http://www.cordis.lu/easw/">http://www.cordis.lu/easw/</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href="http://www.kmi.re.kr/">http://www.kmi.re.kr/</a> (시나리오 워크숍 모델을 수정 적용한 '지역포럼' 소개)	

## 5. 시나리오워크숍 진행계획(안)

### 5.1 진행일정(안)

- 진행기간 : 2005. 9 ~ 2005. 11(3개월)
- 장소 : 광진구민회관, 국립서울병원 등 지역 내 장소 교대로 활용



- 회의 간격 및 시간 : 주 1회, 1회 8시간
- 회의일수 : 12일 (4일 X 3개월)
- 총 회의시간 : 약 100시간 (8시간 X 4일 X 3개월)

## 5.2 참여자 선정(안) : 16~20 명

- 공무원 그룹 : 복지부, 서울시, 광진구 등 4~5명
- 주민대표 그룹 : 이진추진위원회, 환자가족, 시민·직능단체 등 4~5명
- 전문가 그룹 : 정신보건, 도시계획, 행정, 정책 분야 등 4~5명
- 기업인 그룹 : 지역 상공인, 건축설계, 도시계획 관련 기업 등 4~5명

## 5.3 의제 선정(안)

- 병원과 지역이 상생하는 뉴타운형 병원 재건축 방안

## 5.4 소요예산(안) : 4,796 만원

- 1) 진행팀 용역비(3인 기준)
  - 책임연구원 : 10만원 X 100 시간 = 1,000 만원
  - 연구원 : 7만원 X 100 시간 = 700 만원
  - 보조연구원 : 5만원 X 100 시간 = 500 만원

계 2,200 만원
  
- 2) 참여자 교통비(15인 기준, 공무원 제외)
  - 10만원/일 X 15인 X 12일 = 1,800 만원
  
- 3) 참여자 식대(20인 기준)
  - 15,000원 X 20인 X 12일 = 360 만원

소계 4,360 만원
  
- 4) 기타 (소모품비, 인쇄비, 다과비, 예비비 등)
  - 4,360만원 X 10 % = 436 만원

합계 4,796 만원

\* 상기 진행일정, 참여자, 의제, 진행자, 예산 등의 진행계획(안)은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충분한 검토와 사전 합의 필요

\* 특히 워크숍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참여자와 진행자, 소요예산의 분담 방법 등은 참여자들의 사전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6. 지역과 병원의 상생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의 기대효과

제2장에서 병원 재건축과 지역발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화에 부정적인 이해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추진위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대화에 나서면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대화보다 보건복지부의 이전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 재건축을 전제로 한 대화만 가능하다는 의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대화에 긍정적인 이해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주민단체 대표들이 대화의 주체가 되자는 의견, 재건축이나 이전의 전제 없이 백지 상태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들의 밑바닥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보건복지부와 이전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만나봐야 서로의 입장 때문에 자기주장만 하고 양보와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나리오 워크숍은 병원 재건축과 이전 간의 줄다리기식 적대적 협상 방식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병원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두 가지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함께 모여 고민하는 협력적 대화 방식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에 의한 갈등해소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이전추진위, 주민, 광진구, 정당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의 전제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토론 방식보다 대화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이

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의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형성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1] 범구민대책추진위원회 홍보물





## [부록 2] 국립서울병원 이전촉구 결의문

중곡동 지역은 광진구의 북서 측 생활권의 중심이며, 중랑구, 동대문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중곡동 중심부에 『국립서울병원』이 40년 동안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더 열악하고 낙후 되어 가고 있고, 역세권 내 토지이용 효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간위주의 개발 방식이 아닌, 문화, 환경, 복지를 고려한 생활중심의 개발이므로, 이에 걸림돌이 되고 도시기능을 저하시키며, 개발의지 마저 발목잡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을 이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반세기 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에게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국립서울병원은 즉각 이전하라!

하나,  
중곡뉴타운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어 광진구 및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국립서울병원은  
즉각 이전하라!

하나,  
중곡동 역세권에 위치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생산적  
이고 활성화되지 못하게 한 국립서울병원은  
즉각 이전하라!

하나,  
국립서울병원은 광진구 북서 측 생활권 중심지역에  
학교 및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도시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깊이 통감 하고  
즉각 이전하라!

하나,  
관계당국은 광진구 40만 주민의 염원을 수수방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도록 앞장서서  
국립서울병원을  
즉각 이전 시켜라!

2005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 [부록 3]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관련 자료

### 1. 추진경과

- 병원현대화 기본계획 수립('89. 4)
  - 현 부지에 건물 신·증축으로 기능 및 시설 현대화
- 병원 이전사업계획 수립('95. 3)
  - 지역주민들의 병원이전요구에 대한 국회청원 등('94. 12)
- 서울시 및 수도권 인접지역 50여개 후보지를 물색,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나 무산 됨.('95. 11 ~ '02. 2)
- 「병원시설 기부자 공모방식에 의한 이전사업을 추진키로 계획 변경」('03. 2. 8)
  - 2차('03. 3월 및 7월)에 걸쳐 공모를 추진한 결과, 병원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미흡으로 무산됨.
- 『현 부지에 병원 재건축』 결정 (2003.8월)
- 2003.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기획예산처)
- '05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

### 2. 이전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

- 정신병원이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이전후보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 이전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해당지역의 유치 찬성·반대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지역 내 갈등 조장

### 3. 이전사업 추진 세부내역

- 이전 계획 수립('95. 3.)
  - '94. 12월 지역주민의 병원 이전 요구가 국회 청원으로 접수됨에 따라 서울

## 근교로 이전 계획수립

·사유 : 현 부지 협소, 철거비용 과다, 건물 철거 시 임시수용시설 확보 곤란 등

- 부지 32,000평 이상, 연건평 20,000평 이상, 병상 수1,000병상 이상

※ '89. 4. 12. 「병원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병원 건물의 신·증축 및 재배치, 기능 및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

### ○ 계획 변경 및 주요 내용

- 병원현대화 기본계획 수정

·정신질환에 대한 종합적 역할수행 및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계획 변경

·부지: 50,000평, 연건평: 17,400평, 병상 수: 960병상

※ 연구소 및 교육훈련기관: 3,000평

- 병원이전사업 계획 변경('98. 12. 29)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이전 부지로 수도권 인접 지역도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고, 이전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 순연

·입원병상 축소, 특성화, 개방화, 재활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매각부지 축소, 자폐증진료소를 외래진료소로 활용하고 입원병동만 이전 및 이에 따른 세입감소로 이전규모 축소

·부지: 40,000평, 연건평: 10,700평, 병상 수: 750병상

- 병원현대화(이전)사업 추진방식 변경

·서울시 및 인접 수도권 지역 후보지의 지역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시설 기부자 공모방식에 의한 부지·시설 확보 후 현 병원부지 양여를 추진

·공모방식으로도 성과가 없을 경우 현행 부지에 개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

·부지: 40,000평, 연건평: 14,000평, 병상수: 900병상

#### 4. 공모신청 공고 내용 : <붙임 1, 2>

○ 관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승인 가능 관련 의견을 첨부토록 함

#### 5. 공모신청 접수, 처리 경과 등

○ 공모 회수 : 2회

○ 접수 기간 및 접수 결과

- 1차('03. 2. 10 공고) : '03. 3.14 ~ 3.31 접수실적 없음

- 2차('03. 4. 26 공고) : '03. 7.21 ~ 7.31 접수실적 없음

○ 재 공모 사유 및 처리 현황

- 1차 공모 시 5개 업체에서 응모하였으나, 제출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승인 가능 관련 의견서”를 구비하여 제출한 업체가 없어 신청서를 접수치 않음

- 2차 공모 시 8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1차 공모 때와 같은 사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남양주시·양주군·고양시에 병원 유치 관련 의견 조회 후 반송함

○ 신청사업자 현황 : <붙임 3>

<붙임 1> 보건복지부공고 제2003-26호

## 병원시설 조성사업자 공모

병원시설을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 기부하고 현 국립서울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양여 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2003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현 국립서울병원의 위치 및 부지면적 개요

기 관 명	지 번	부지면적(평)	건물면적(평)
국립서울병원	계	13,854	9,299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29-1	1,618	2,038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30-1	12,236	7,261

### 2. 병원시설 조성개요

가. 부지면적 (가용면적 기준) : 40,000평 내외

나. 건물면적 : 14,000평 내외

다. 병원시설 조성위치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접경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민 및 접경 인근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여건이 편리하며 병원시설 설치에 지역 및 환경여건 등이 적합한 곳

라. 부지선정 조건

국립서울병원 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마. 기부 기한 :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바. 신청서 접수

- 1) 기 간 : 2003. 3. 14 ~ 3. 31
- 2) 장 소 : 국립서울병원 사무과(용도)
- 3) 제출서류
  - ① 일반건설업 면허증 사본
  - ② 신용등급 증명서류(건설공제조합 발행)
  - ③ 후보지 위치도(1/25,000) 및 후보지 설명서
  - ④ 토지목록
  - ⑤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계약서
  - ⑥ 토지이용계획서
  - ⑦ 지적도
  - ⑧ 조성계획 개요
  - ⑨ 후보지 전경사진
  - ⑩ 지역 해당 기초 및 광역단체장의 도시계획 승인 가능 관련 의견서
  - ⑪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참여업체 자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기업 중 병원시설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법인, 공기업

나.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의 1등급 업체 중 100위 이내의 업체

다. 가, 나의 해당 단체, 법인, 공기업, 업체로서 후보 지역주민의 유치 동의서를 제출한 사업자 우대

라. 다음 각 호의 업체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화의중이거나 이를 신청중인 업체
- 2) 기업개선명령(워크아웃)을 받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업체
- 3) 법정관리중인 업체
- 4) 기업합병 또는 청산중인 업체
- 5)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승인 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상 관련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후보지를 제출한 업체

**4. 사업자 선정**

2003. 5. 15.까지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 5. 합의각서 교환

가. 병원시설 조성사업 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후보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 포함)를 제시하고 합의각서에 기명 날인하여 교환한다

나. 선정된 사업자가 기간 내에 합의각서 교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한다(이 경우에도 준비기간 3개월 부여)

## 6. 기부 및 양여

가. 국립서울병원 대체시설을 완공하여 보건복지부에 기부한 경우 동 시설 조성비 범위 내에서 현재의 국립서울병원의 부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평가하여 양여한다.

나.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한 가격산정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때 보건복지부 및 기부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 7. 기타사항

본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서울병원 서무과(용도)로 문의. (전화: 02-2204-0124 ~ 5)

## 병원시설 조성사업자 재 공모

2003. 2. 10공모하였던 병원시설조성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재 공모하오니 병원시설을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 기부하고 현 국립서울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양여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공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현 국립서울병원의 위치 및 부지면적 개요

기 관 명	지 번	부지면적(평)	건물면적(평)
	계	13,854	9,299
국립서울병원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29-1	1,618	2,038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30-1	12,236	7,261

### 2. 병원시설 조성개요

가. 부지면적 (가용면적 기준) : 40,000평 내외

나. 건물면적 : 14,000평 내외

다. 병원시설 조성위치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접경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민 및 접경 인근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여건이 편리하며 병원시설 설치에 지역 및 환경여건 등이 적합한 곳

라. 부지선정 조건

국립서울병원 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장의 관련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마. 기부 기한 : 착공 일로부터 3년 이내

바. 신청서 접수

1) 기 간 : 2003. 7. 21 ~ 7. 31. 17 : 30

(직접 내방 접수만 가능)

2) 장 소 : 국립서울병원 서무과(용도)

3) 제출서류

- ① 일반건설업 면허증 사본
- ② 신용등급 증명서류(건설공제조합 발행)
- ③ 후보지 위치도(1/25,000) 및 후보지 설명서
- ④ 토지목록
- ⑤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계약서
- ⑥ 토지이용계획서
- ⑦ 지적도
- ⑧ 조성계획 개요
- ⑨ 후보지 전경사진
- ⑩ 지역 해당 기초 및 광역단체장의 도시계획 승인 가능 관련 의견서
- ⑪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위 제10항의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장의 도시계획승인가능 관련 의견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일체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3. 참여업체 자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기업 중 병원시설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법인, 공기업

나.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의 1등급 업체 중 100위 이내의 업체

다. 가, 나의 해당 단체, 법인, 공기업, 업체로서 후보 지역주민의 유치 동의서를 제출한 사업자 우대

라. 다음 각 호의 업체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화의중이거나 이를 신청중인 업체



- 2) 기업개선명령(워크아웃)을 받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업체
- 3) 법정관리중인 업체
- 4) 기업합병 또는 청산중인 업체
- 5)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장의 도시계획승인 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상 관련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후보지를 제출한 업체

#### 4. 사업자 선정

2003. 9. 30까지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 5. 합의각서 교환

가. 병원시설 조성사업 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후보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 포함)를 제시하고 합의각서에 기명 날인하여 교환한다

나. 선정된 사업자가 기간 내에 합의각서 교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한다(이 경우에도 준비기간 3개월 부여)

#### 6. 기부 및 양여

가. 국립서울병원 대체시설을 완공하여 보건복지부에 기부한 경우 동 시설 조성비 범위 내에서 현재의 국립서울병원의 부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평가하여 양여한다.

나.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한 가격산정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때 보건복지부 및 기부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 7. 기타사항

본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서울병원 사무과(용도)로 문의(전화: 02-2204-0124 ~ 5)

<붙임 3> 2003년도 병원시설 조성사업자 공모 신청사업자 현황

시기	소재지	자치단체장 협조 승인서 (기초 및 광역단체)	관련업체명
1차	- 경기도 양주군 장현리 (관리지역) - 경기도 구리시 토평지구	-구비서류 미비 (기초단체장 유치 반대)	이수건설
	-서울시 금천구(55,000평)	-기초단체장 의견서 제출 - 광역단체장 의견서 없음	태 영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33,349평)	- 구비서류 미비 (기초및광역단체장 유치 의견서 없음)	풍림산업
	-성남시 중원구(52,000평)	- 구비서류 미비 (기초및광역단체장 유치 의견서 없음)	울트라
	-남양주시 진건읍(43,000평)	-구비서류 미비 (기초및광역단체장 유치 의견서 없음) -접수(우편접수)기한 경과	(주)반도
2차	-	-구비서류 미비 (유치의견 없음, 공문이 타회사 명의)	이수건설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수준, 유치 가능 의견으로 볼 수 없음	(주)현대산업개발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 산50-3외	"	(주) 반 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 113번지 일원	"	"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	
	남양주시 가곡리	"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352-1외	"	(주)SK건설
	의정부시 녹양동 308번지	-의견 없음	(주)벽산건설
	금천구 시흥동	-종합의료시설의 경우 설치 가능 하다는 의견	(주)태영·월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 산159-1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수준, 유치 가능 의견으로 볼 수 없음 (공문 타 회사 명의)	(주)대호건설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용인시 남사면 통삼리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수준, 유치 가능 의견으로 볼 수 없음	(주)한신공영	

## [부록 4]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사업 예산 설명자료

###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 (신규)

#### 1. DB관리 항목

##### 1.1 예산과목

회계	소관	계정	관	세항	세세항	세사업
일반 회계	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	국립 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사업	
11	25		347	1420	213	세사업코드

##### 1.2 관리항목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예산점검 관리대상	R&D 사업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여부	출연기관코드
■						

※ 2003. 10. 28.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됨(기획예산처 관총58520-76)

##### 1.3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 대상

사업 수행(대행)기관명	사업지역	지원대상자
국립서울병원	서울	-

##### 1.4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2004결산	2005예산 (A)	2006예산(안)		증 감	
		부처안	검토안(B)	(B-A)	%
-	-	3,765			

##### 1.5 사업 이력 내용

- 사업 추진경위

- 병원현대화 기본계획 수립('89. 4)
  - 현 부지에 건물 신·증축으로 기능 및 시설 현대화
- 병원 이전사업계획 수립('95. 3)
  - 서울시 및 수도권 인접지역 50여개 후보지를 물색,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나 무산 됨.('95.11 ~ '02.12)
    - ※ 지역주민들의 병원 이전요구 국회청원 등('94.12)
- 병원시설 기부자 공모방식에 의한 이전사업 추진('03. 2 및 '03. 4)
  - 2차에 걸쳐 공모를 추진한 결과, 병원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미흡으로 무산 됨.
    - ⇒ 이에 『현 부지에 신축』으로 방침 결정('03. 8월 장관 결재)
- 2003.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기획예산처)
- '04년도 '05회계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조사설계비 1,003,007천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국회심의 중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됨

○ 회계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예산현황 : '97년부터 '03년까지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전액 불용 처리됨
  - '97. 184억원, '98년 194억원, '99년 266억원, '00년 123억원, '02년 30억, '03년 82억

## 2. 사업 설명자료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04 결산	2005 예산 (A)	2006예산(안)		증 감 (B-A)	%
			부처안	검토안 (B)		
계	-	-	3,765			
○ 병원 재건축 사업	-	-	3,765			

### 2.1 '06년 사업개요

### 2.1.1 사업목적

'61년 건립되어 매우 낡고 현재의 치료 환경에 부적합한 병동 등을 재건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중추적 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최고의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 2.1.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2009년
- 총사업비 : 858억원
- 사업규모 : '06년 38억(설계지침연구 1억, 설계비 37억)
  - 중앙진료병동(700병상) 및 정신보건연구소 등 11,197평
  - ※ '04년 기획예산처 '05년 예산심의 결과
    - : 중앙진료병동 재건축만 인정, 총 사업비 545억원(공사비 516억원, 설계비 22억원, 시설부대비1억원, 감리비 6억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현부지(서울 광진구 중곡동) 재건축 반대 주민 등과의 갈등 평가 및 해결 대안 마련
- 사업시행주체 : 국립서울병원 서무과

## 2.2 '06년 예산안 (부처 요구)

### 2.2.1 사업내용

- 「“1”항과 동일」

### 2.2.2 산출근거 및 지원 필요성

- 산출근거
  - 설계지침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 설계비 적용기준 : 중앙진료병동은 건설부분요율 3종(복잡), 정신보건연

구소 등은 2종(보통) 적용

- 산출내역

- 중앙병동 설계비 : 공사비 61,911,465천원×5,16,858%=3,199,9444천원
- 연구소 등 설계비 : 공사비 9,263,536천원×5.0224%=465,252천원
- 기본조사설계비 : 총설계비3,666,196천원\*45%=1,649,338천원
- 실시설계비 : 총설계비3,666,196천원\*55%=2,015,858천원
- 기본조사설계지침 연구 : 100,000,000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A)	'06부처안 (B)	증 감 (B-A)	
					%
□ (합계)			3,765		
○ 세사업명	-	-	3,765		
▪ 물량 (예시)			·설계지침연구 : 100백만원		
▪ 단가			·기본조사설계비 1,649백만원		
▪ 보조율 등			·실시설계비 2,016백만원		
○ 세사업명					
▪ 물량 × 단가 × 지원율 (예시)					
□ 비목별 (합계)			3,765		
○ 용역비(206)			100		
○ 기본설계비(401)			1,649		
○ 실시설계비(402)			2,016		

3. 협의·보완사항 : 2004년 예산처 총사업비 산출 결과 재검토 요청

3.1 2004년 예산처 총사업비(총 54,498,496천원) 산출 내역

- 건축공사비(중앙진료병동신축) : 10,319평×500만원 = 5,159,500천원

○ 설계비

$$4.32 - \frac{(516\text{억}-500\text{억})(4.32-4.25)}{1000\text{억}-500\text{억}}$$
$$= 4.32 - \frac{16\text{억} \times 0.07}{500\text{억}} = 4.32 - \frac{1.12}{500\text{억}}$$

$$= 4.32 - 0.0022 = 4.3178\%$$

$$= 4.32178\% \times 51,595,000\text{천원} = 2,227,768\text{천원}$$

$$\text{- 기본설계비} = 2,227,768\text{천원} \times 45\% = 1,002,495\text{천원}$$

$$\text{- 실시설계비} = 2,227,768\text{천원} \times 55\% = 1,225,272\text{천원}$$

○ 감리비 =  $1.08 - \frac{16\text{억} \times (1.08-1.07)}{500\text{억}}$

$$= 1.08 - \frac{16\text{억} \times 0.01}{500\text{억}}$$

$$= 1.08 - 0.00032 = 1.07968\%$$

$$= 1.07968\% \times 51,595,000\text{천원} = 557,060\text{천원}$$

○ 시설부대비 =  $51,595,000\text{천원} \times 0.23\% = 118,668\text{천원}$

### 3.2 검토가 필요한 사유

○ 중앙진료병동 **신축 단가**(평당 500만원 적용)는 '02년 유사 공사비 적용단가로서 '07년부터 공사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과 맞지 않음(요구 600만원)

○ **감리비**로 예산편성 및 기준 건축부문 요율 3종(복잡)적용(6억원)되었으나, 건축관련 법령상 책임감리비(23억 소요)가 적용되어야 함

○ 신축공사시 중앙진료병동 공사외에 철거공사, 대체시설 설치, 부대공사가 이뤄지므로 관련 예산 확보 필요함

○ 설계지침용역 및 설계실시로 공사규모가 최종 확정되므로 우리 원 사업비 산출내역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4. 중기재정 소요전망('06~'09)

### 4.1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본조사 설계지침 연구 및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착수 후 연도별·공정별 공사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4.2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85,802	
'04까지	-	
2005	-	
2006	3,765	설계지침연구 1억, 기본조사설계 16억, 실시계비 20억
2007	24,749	건축공사 186억, 대체시설공사 4억, 건물철거공사 5억
2008	23,022	건축공사 186억, 시설부대경비 9억, 전산 및 의료장비 35억
2009	34,266	건축공사 298억, 부대시설공사 13억, 시설장비부착물 6억 등

※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 총 85,802,089천원('06~'09)

- 건축공사비 : 66,910백만원
  - 중앙진료병동 10,319평(34,111㎡)×600만원=61,911,465천원
  - 정신보건연구소 606평(2,002㎡)×600만원=3,633,630천원
  - 기숙사 266평(880㎡)×500만원=1,330,560천원
  - 경비실 7평(23.14㎡)×450만원=34,987천원
- 대체시설비 2,132평(7,048.53㎡)×200만원=4,264,359천원
- 부대시설공사 2,991평(9,886㎡)×600만원=1,820,076천원
- 시설장비 및 부착물 : 565,500천원(환자사물함 및 침대, 각종 표지 등)
- 자동화 설비 : 362,000천원(물류반송설비, 화상정보처리 등)
- 건물철거공사 : 7261평×20만원=1,452,224천원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 6,927,288천원
- 전산 및 의료장비 : 3,500,000천원



## 5. 고려사항

### 5.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립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에 의한 국가기관으로서 정신질환자 진료업무를 하고 있음

○ 추진경위

- 병원 주요 건물 대부분이 60~70년에 건축되어 시설이 매우 낡아 위험하고 불편하며, 현대적인 치료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등 진료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음

- 급증하는 정신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여 인프라를 보강하고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현 부지에서 병원 재건축 추진

· '95. 3~'03 7월까지 병원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됨

· '03. 8~현재까지 병원재건축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및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평가 용역 중임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 병원재건축 사업	-	-	-	-	-	38

### 5.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5.3 '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실적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 5.4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5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5.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사례> 북부 노인전문병원 및 중량 치매노인요양원 신축공사

- 위 치 : 중량구 망우동 235-1호 일대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21,630m<sup>2</sup>
    - 북부 노인전문병원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16,117m<sup>2</sup>
    - 중량 치매노인병원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5,513m<sup>2</sup>
  - 공사기간 : 2002. 7. 30 ~ 2006. 5. 10(46개월)
  - 총공사비 : 35,621백만원
    - 건축공사 : 31,295백만원
    - 전기.통신공사 : 4,326백만원
- ※ 건축비단가
- 1) 35,621백만원 ÷ 21,630 m<sup>2</sup> = 1,646,833원(평당5,444,100원)
  - 2) 공사비중 설계비 및 감리비 제외

## 5.7 사업추진절차

## 5.8 예비타당성 조사

- '03. 10. 28. 기획예산처 관총58520-76호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됨

[부록 5] 이해관계자 면담 협조요청 공문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관계기관 면담 협조요청

1. 우리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병원은 정신보건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환경분쟁연구소에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니, 동 기관의 면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이해관계자 여론조사 협조요청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정신보건과-1066 (2005.04.16.) 접수 ( )

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

전화 02-503-7544 전송 02-504-6206 / cks12@mohw.go.kr / 비공개

## 제목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이해관계자 여론조사 협조요청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십니까.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이 광진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립적인 제3의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면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간 : 2005. 4. 20 ~ 5. 31

### 2. 목적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관련 주요 기관, 단체, 주민들의 여론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 지역발전의 조화방안 강구

### 3. 조사 연구진

-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 국무조정실 갈등영향분석 전문가
- 김광구 경희대 교수,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김선업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데이터분석센터 실장, 사회학박사
-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

### 4. 조사내용

- 병원 현대화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 이해관계자별 주된 이해관계의 내용
- 이해관계자들 의견의 공통점과 상이점
- 병원 현대화사업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

### 5. 조사대상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 보건복지부, 국회, 광진구, 시·구 의회, 사회단체, 전문가, 환자가족 등

### 6. 조사방법

-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직접 면담
- 면담 내용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주제별, 그룹별로 정리
- 이해관계자들 의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 해소방안 검토
- 조사보고서 초안 이해관계자 공람, 검토의견 접수, 수정·보완

### 7. 문의사항 연락처

환경분쟁연구소(031-424-5525) 정미경 연구원“끝”

## [부록 6] 이해관계자 면담 질문요지

### 1. 국립서울병원은 혐오시설인가?

- 누구에게 혐오시설인가(주변 상인, 주민, 개발업자, 지자체, 정치인)
- 병원 주변과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비교
- 지방세 납부, 주민 고용창출, 병원 이용 등 지역 기여도
- 병원 이전을 공약한 정치인 현황

### 2. 국립서울병원은 광진구 지역발전의 걸림돌인가?

- 병원 대신 무엇이 있어야 지역발전인가
- 아파트, 상가, 공원, 학교, 종합병원, 도서관, 극장
- 지역발전의 비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 3. 병원 이전은 가능한가?

### 4.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은?

### 5. 바람직한 대안은?

- 병원 이전
- 병원 재건축
- 병원과 지역발전의 연계, 조화

### 6.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안은?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대화 가능성
- 소송, 시위, 로비

### 7. 국립서울병원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 [부록 7]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 요약

### 1. 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직원들은 이전을 싫어한다.</li> <li>○ 병원이 주민들을 보면 웃을 것이다. 백날 해봐야 안 되는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는 이전의지가 있지만 병원은 없다</li> <li>○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와서 주민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전철역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설치용 부지를 요구했는데 병원측이 거부했다</li> <li>○ 병원장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갈 생각이 없다. 이전 공모해도 안 되는 조건만 제시했다</li> <li>○ 병원장에게 만나자고 전화해도 응답이 없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은 재건축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했다</li> <li>○ 소아자폐증 진료소 지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차장 개방하고, 어린이집 짓는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li> <li>○ 의장이랑 같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장이 방문취지를 설명하니까 말꼬리부터 물고 늘어져서 불쾌했다.</li> <li>○ 이전요구 서명 받으러 가면 병원 직원들은 절대로 이전 안 한다고 써준다</li> <li>○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보다 신뢰하는 편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을 희망하는 시.군이 보건복지부에 이전계획에 대해 문의하면 보건복지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해서 추진한 사람만 사기꾼 만든다</li> <li>○ 병원이 이전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아나서야 한다</li> <li>○ 병원이 재건축 과정의 임시 진료시설 문제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곳이면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이전대상 부지가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남양주 시장을 만나볼 의향도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라는 데는 있는데 병원이 의지가 없어서 안 간다</li> <li>○ 보건복지부장관의 속을 모르겠다. 유치지역 시장이 만나겠다는데 보건복지부가 안 움직인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이 "이전요구 현수막 걸면 저러다 말겠지. 지치면 그만 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이 너무 불투명하다. A씨가 그렇게 땅 찾으러 다니면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땅이 있어도 이전의사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얘기해줘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다</li> <li>○ 보건복지부가 확실하게 얘기해서 포기하게 해야지 A씨도 용인에 병원 부지가 있다는 것은 모를 것이다</li> <li>○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li> <li>○ 정책이 바뀌었으면 바뀐 정책을 들고 나와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한다.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년 전에 구청에서 병원 부지 일부를 중학교와 체육센터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손톱도 안 들어갔다</li> <li>○ 2003년 민간사업자 공모 때 시장,군수 동의는 받았는데 도지사 동의 때문에 무산됐다</li> <li>○ 민간사업 공모조건에 시장, 군수의 유치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이해하지만 도지사의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다. 보건복지부가 이전하기 싫으니까 수 쓴 것이다</li> <li>○ 병원 직원들이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 현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병원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게 문제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직무유기 하고 있다. 시설이 너무 노후 됐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공사에서 사전협의 없이 중곡역 엘리베이터 부지 요청 공문 1장만을 보내왔었고, 재건축 설계시 공간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부지 일부를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li> <li>○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거나 협의하지는 않았다</li> <li>○ 병원에서는 개원 이후 많은 대지를 지자체에 내주었으며, 특히 병원앞의 도로부지, 중광초교 부지, 중곡역 출구부지 등을 제공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부지 제공은 병원 재건축 과정에서 구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의했다</li> <li>○ 현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은 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고, 강당, 실내체육관, 연구소 등의 신축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모두 구청의 건축허가 사항이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여부는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으며, 이전후보지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li> <li>○ 전임 원장 때 병원을 이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li> <li>○ 현 원장 부임 후에도 4~5곳 정도 이전대상 부지를 조사해 봤는데 조건이 미흡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돼 포기했다</li> <li>○ 10여 년 동안 부지를 찾아봐도 없어서 교도소 이전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사업 공모 방식을 추진했다</li> <li>○ 민간사업자 공모방식도 안 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당시 장관이 결재했다</li> <li>○ 1차 공모에서 부지 선정을 못했지만 공모에 응했던 한 회사가 금천구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제의했다</li> <li>○ 예산 때까지 시간 여유도 있고 공모절차가 두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2차 공모를 했다</li> <li>○ 그런데 기대했던 회사는 공모를 포기하고 공모에 응한 8개 회사 중에 이전지역 단체장의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2003년 8월에 재건축 방침을 결정했다</li> <li>○ 공모 조건에 광역단체장의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 등 그 당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포함했다</li> <li>○ 지난 총선 전에 구청에 얘기하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해서 재건축 방침을 공론화하지 않고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했다</li> <li>○ 지역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지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국립의료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얘기해서 동의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li> <li>○ 보건복지부의 재건축 의지는 확고하며,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전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며, A씨에게도 이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li> <li>○ 용인에는 대규모 민간정신병원이 있어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서류미비 때문이다</li> <li>○ 공모시 제출한 서류가 모호하여 일단 받아놓고, 지자체 동의여부를 공문으로 확인한 바 이전 동의 의사가 없어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였다.</li> <li>○ 테니스장은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특별회원이다.</li> <li>○ 주민 20여명이 야간에 주차장을 이용중이며, 휴일에는 인근 교회 신도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li> <li>○ 어린이집은 소아자폐증진료소 개원시부터 운영해오다 2003.9월 이용자가 없어 폐쇄했다(병원내에 있어 지역주민이 기피한다)</li> <li>○ 이전추진위에서 직접 만나자는 전화연락이 없었고 간접적으로 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통하여 만날 의향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병원에서 연락하여 이전추진위 대표들을 병원에서 만났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니스장도 개방하면 좋는데 폐쇄적이다. 병원이 교도소 같다</li> <li>○ 국립시설이라 지방세 수입도 없다. 광진구 주민들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다</li> <li>○ 동네 할인행사 등으로 주민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슈퍼마켓보다 도움이 안 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민간사업자 공모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은 지역이 있다</li> <li>○ 서울 근교로 부지 4만평 이상, 연건평 1만4천 평 이상 건물 신축 후 병원부지와 교환하고 감정평가액에 따라 차액 정산 조건으로 공모했다</li> <li>○ 2003년 7월에 마감시한까지 접수를 기피하다가 8개 회사가 저녁 7시에 동시 접수했는데 3일 만에 반려했다</li> <li>○ 병원이 이전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했다</li> <li>○ 병원 직원들은 아이들 교육문제 등으로 서울에 있기를 원한다.</li> <li>○ 병원의 집단이기주의다. 변화를 싫어하고 귀찮은 일은 안 한다</li> <li>○ 병원이 이전할 생각이 없으면서 시간만 끄는 것 같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자폐아진료소 지을 때도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li> <li>○ 주민들은 병원에서 너무 무리한 유치조건을 제시해서 이전추진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민간사업자가 이전지역 유치희망서를 받으려면</li> </ul>

	<p>토지를 가계약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전지역 시장,의회가 동의해도 보건복지부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우려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은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안 가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자에 붙어있는 불친절이 아직 존재한다.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li> </ul>

## 2. 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 및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에 산지 30년 됐다. 광진구 남쪽(화양동, 자양동, 노유동)은 발전이 많이 됐는데 광진구 북쪽(중곡동)은 그대로다</li> <li>○ 병원이 이전해야 뉴타운도 되고, 학교도 들어설 수 있다</li> <li>○ 법원이 간다면 병원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li> <li>○ 병원도 공기 좋고 조용한 데로 가면 좋을 것이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파구로 법원단지가 간다면 병원도 함께 가야 한다</li> <li>○ 국립서울종합병원으로 가면 송파구 주민들이 받아줄 것이다</li> <li>○ 남한산성 밑에 부지가 있다고 들었다</li> <li>○ 송파구 의회에 종합병원으로 받으라고 얘기했다</li> <li>○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얘기는 온당치 않다</li> <li>○ 군자동은 어린이공원 때문에 건축규제하고 중곡동은 병원 때문에 건축 규제 한다</li> <li>○ 병원을 옮기면 뉴타운 개발이 가능하고 지역이 발전한다. 광진구 지방세수에도 도움이 된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진구에 있는 법원을 송파구 장지동으로 이전하는 계획(2008년 예정)이 병원이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li> <li>○ 15대때 지역국회의원이 병원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li> <li>○ 중곡동은 낙후지역이라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li> <li>○ 뉴타운 지정신청이 반려되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됐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은 이전해야 한다. 진료 환경도 열악해지고 지역발전의 걸림</li> </ul>

	<p>돌이기도 하다. 병원이 재건축되면 더욱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어 후손들의 미래 교육환경에도 치명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 지역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키며 40년 병원 입지 여건과 주민수요가 맞지 않다</li> <li>○ 보건복지부도 이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과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는 이전을 원하는데 병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민간사업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li> <li>○ 보건복지부가 한동안 이전을 위해 부지를 물색한 노력은 인정한다. 사기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이유로 이전방침을 철회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li> <li>○ 법원 이전문제와 연계하다가 분리해서 병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li> </ul> </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은 2종 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이 200%다. 3종 주거지역 용적율 250%로 풀려고 했는데 병원이 있으면 역세권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풀지 못하고 있다</li> <li>○ 정신병원은 쾌적한 공간으로 가야 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중 22위다. 병원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병원 때문에 뉴타운 지정이 안 됐다</li> <li>○ 병원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전을 추진했지만 5~6년이 지나도 부지를 구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반납했다</li> <li>○ 이미 재건축 공사 중이라면 주민도 포기하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이전해야 한다</li> <li>○ 병원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고, 병원건물도 노후됐고, 유치희망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 전부 연립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다</li> <li>○ 환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히죽히죽 웃으면 아이들이 무서워한다</li> <li>○ 병원 옆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크다. 소리지르고 알몸으로 나온다</li> <li>○ 정치인들이 선거때만다 공약하지만 이제는 안 속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여기 오래 있었으니 다른 데도 있어 보라는 얘기가</li> <li>○ 병원이 안 가면 내가 이사가는 수밖에 없다.</li> <li>○ 뉴타운 개발 때문에 이전하라는 게 아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까봐 문 잠그고 산다</li> <li>○ 병원 때문에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된다. 길 건너는 잘 된다</li> <li>○ 정신병원이라는 말 자체가 혐오감을 준다</li> <li>○ 정신병원도 진료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전에는 아차산 환경이 좋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많이 나빠졌다</li> <li>○ 통원치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불안할 것이다</li> <li>○ 병원직원들도 이전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동에 사는 직원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겠나</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세 이상 주민은 국립서울병원을 지역발전의 걸림돌과 낙후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li> <li>○ 고층 아파트가 없으니까 지역발전이 안되고, 재산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십리, 장안평이나 건국대역 아래 쪽 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되었다는 박탈감이 있다.</li> <li>○ 중국 1동은 작년부터 8~10% 정도 전세 공실율이 높아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다. 세입자들이 장안평 등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해 나간다</li> <li>○ 병원이 지가 상승을 막는 원인이다. 혐오시설 이미지가 강해 전세나 가게등이 나가질 않는다.</li> <li>○ 정신질환자는 조용하고 공기와 물 좋은 곳에서 격리하여 치료해야 한다</li> <li>○ 국립서울병원 이전은 선거철 공약이었고, 지금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이전요구일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의 여론 자체가 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li> </ul> </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이용했다</li> <li>○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사실이지만 병원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li> <li>○ 경제상황이 나쁜 것을 병원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li> <li>○ 병원의 재건축 추진 과정은 알지 못한다.</li> <li>○ 지역 정치인들은 재건축을 반대할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이 광진구에서 가장 낙후지역이다. 자양동은 평당 2천만원인데 중곡동은 도로변이 8백만원, 주택가는 6~7백만원이다</li> <li>○ 정신병원이 발전의 걸림돌이다.</li> <li>○ 정신병원 때문에 땅값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지역이 낙후된 것도 아니다</li> <li>○ 병원부지가 넓어 공지가 많으니까 병원이 나가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서울병원 환자들이 왕래하면서 종종 환자와 가족간의 실랑이가 발생한다.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li> <li>○ 대다수 주민들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또라이공장 있는 동네로 인식한다</li> <li>○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하지 않아 뉴타운 지정이 안 됐다</li> <li>○ 용마사거리를 경계로 하여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신병원 때문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다. 뉴타운 지정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li> <li>○ 정신병원은 도심에 위치하면 안 된다. 도시 외곽의 국유지로 이전해야 한다.</li> <li>○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낀다</li> <li>○ 정신병원이 지역 이미지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양동, 노유동 모두 발전하고 있는데 중곡동은 땅이 없어서 발전이 어렵다</li> <li>○ 중곡동에 중. 고등학교가 없어서 멀리 통학하고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는 데 큰 지장은 없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다.</li> <li>○ 병원 때문에 규제가 묶인 건 아니다. 토지구획정리 하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li> <li>○ 도시계획 변경 때 3종(용적율 250%)으로 거의 다 됐었는데 부동산 투기 바람 때문에 2종(200%)으로 됐다</li> <li>○ 정신병원이라는 이미지가 문제다. 주변에 개인 정신병원도 많은</li> </ul>

	<p>데 가끔 소란도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들이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고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1동은 병원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나 학교도 없고 미관상 좋지 않아 가능하면 이전하면 좋겠다.</li> <li>○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전을 요구하기는 명분이 조금 약하다. 이전 요구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다만 이미지가 부정적일 뿐이다.</li> <li>○ 병원이전은 정치적 공약에 의해 제기된 분란이다.</li> <li>○ 집값, 전세값 하락은 최근 장안평 등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지 병원 때문은 아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다.</li> <li>○ 도시화되면서 병원 주변 환경이 나빠졌으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다. 정신질환자들은 공해가 치명적이다.</li> <li>○ 병원의 기능만 바꾸는 것은 지역에 도움되지 않는다. 병원이 중곡동에 있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li> <li>○ 대(주민)를 위해 소(환자)가 희생해야 한다. 이전 이외는 대안이 없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층아파트, 대형 할인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li> <li>○ 주민들은 이전을 바라고 있다. 지역이 발전해야 땅값도 올라간다</li> <li>○ 정신질환자 통원진료는 잘못된 생각이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 주민들의 상대적 상실감 때문이다.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것은 정신병원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li> <li>○ 자양동 편중 개발에 중곡동 주민들의 소외감이 크다. 광진구의 남북 갈등이다</li> <li>○ 병원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해서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다</li> <li>○ 병원부지를 포함한 뉴타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병원이이전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보건 정책의 측면에서만 보면 병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li> </ul>

	<p>는 없다. 환자를 위해서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보건복지부 생각도 그럴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하든 안 하든 병원 현대화는 해야 한다. 노유동에 노인치매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다</li> <li>○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립회관도 광진구에 있지만 산 속에 있어서 이전하라는 얘기가 없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구의동, 자양동, 노유동은 많이 발전했는데 중곡3동은 광진구에서도 소외지역이다</li> <li>○ 발전이 없고 낙후돼 있다.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 저층 아파트 몇 채 정도밖에 없는 정체된 곳이다.</li> <li>○ 보건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정신병원이라고 부른다.</li> <li>○ 어디 사냐고 물으면 정신병원 옆에 산다고 대답해야 하고, 택시를 타도 정신병원 쪽으로 가자고 얘기해야 한다. 스트레스다</li> <li>○ 병원을 옮기면 지역이 발전한다는 인식이 있다. 병원 때문에 특별히 피해를 입는 건 없지만 정신병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li> <li>○ 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 뉴타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하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에 산다고 하면 정신병원 있는 곳 아니냐고 반문한다</li> <li>○ 공무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싫은 게 사실이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만이 이전요구 이유는 아니다</li> <li>○ 병원을 옮기겠다고 했다가 안 옮기겠다고 하는 등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 발전의 걸림돌이다. 종합병원도 아닌데 너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li> <li>○ 연말까지 이전 추진해보고 안 되면 재건축도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다</li> <li>○ 이전대상 부지가 남양주에 2곳이 있고 가평은 아주 적극적이다</li> <li>○ 병원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공감감이 안 간다</li> <li>○ 직원들은 옮기기 싫겠지만 이전하면 기숙사도 있지 않나</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이용자들이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현 위치가 바람직하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선거 때문이다</li> <li>○ 병원이 그 동안 지역을 위해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li> <li>○ 병원의 부정적 이미지도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li> <li>○ 중곡동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중곡역&lt;용마산역 &lt;군자역의 순서로 땅값에 차이가 있다</li> <li>○ 중곡동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사실이다. 화양변전소와 병원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있다</li> <li>○ 학교가 부족하다. 중고등학생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 아니었다면 재산권 때문에 이전요구했을지도 모르겠다</li> <li>○ 국립병원이라 비용이 저렴하다. 오히려 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이전하라고 요구해서 답답하다</li> <li>○ 소아자폐진료소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다. 서울대, 연세대에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르다. 비용도 비교가 안 된다</li> <li>○ 국립병원은 본인부담이 월 15~20만원 정도다. 서울대는 70만원, 사설기관은 30분 운동에 5만원 받는 곳도 있다</li> <li>○ 4년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아이가 사람이 됐다. 서울에서 없어진 애가 인천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 달리는 차로 뛰어든 적도 있다. 이제는 밖에 나갔다가 혼자 돌아온다.</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진료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 서울대병원은 500만원/월, 고대,연대 병원은 300만원/월, 일반병원은 100만원/월인데 국립병원은 훨씬 저렴하다</li> <li>○ 가족들은 비용이 저렴한 국립병원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li> <li>○ 전두환 대통령 때 나환자촌처럼 정신질환자 재활촌을 구상한 적이 있는데 인권단체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보건 정책이 격리수용에서 재활복귀로 바뀌고 있다</li> <li>○ 병원이 노후해서 현대화가 필요하다</li> <li>○ 용인에 부지가 있지만 용인에는 민간정신병원이 있고 산골짜기라 재활복귀 정책과 맞지 않아 백지화했다</li> <li>○ 과거에 정신병동 병상이 부족할 때는 국립병원의 역할이 컸지만</li> </ul>



	<p>지금은 민간시설이 많이 생겨서 국립병원 병상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정신보건센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에서 퇴원하면 기도원으로 가는 것을 환자가족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용시설 확장은 이런 추세가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수용보다 외래통원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li> <li>○ 국립시설이 기도원의 대체효과가 돼서는 안 된다. 현재 900병상을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li> <li>○ 가족들은 적극적인 재활이나 사회복귀보다 격리수용을 위해 의료보호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li> <li>○ 기도원을 단속하면 일단 나갔다가 신자가 되어 다시 들어오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간다</li> <li>○ 정신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계기능을 연구하고, 시.군별로 보건소 부설 정신보건센터를 설립 중이다.</li> <li>○ 병원과 가족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li> <li>○ 이런 방향이 정착되면 병원은 서울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받아주는 데가 있다고 해도 이제는 안 간다. 용인에 부지가 있지만 그곳에는 민간정신병원이 있어서 못가고 호스피스 시설로 지으려고 한다. 당초에는 경기정신병원으로 하려고 했다</li> <li>○ 적절한 부지가 나와도 이제는 가기 어렵다</li> <li>○ 병원과 교육.연구 기능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신보건은 돈이 안 되니까 민간부문의 연구 기능이 취약하다. 아직 연구중이라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li> <li>○ 재건축 문제는 그 동안 병원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li> <li>○ 이전여부는 직원과 상관없으며, 직원들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적이 없다</li> <li>○ 남한산성 밑의 부지는 직접 가보았고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시에서 거부하였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차별은 부당하다</li> <li>○ 일반환자는 도심지에 있는데 정신질환자만 산으로 가야 하나</li> <li>○ 국립병원의 상징성도 있는데 아무 데나 갈 수는 없다. 서울 근교라면 이전할 수 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는 입원수용이 아닌 지역 사회 내에서의 통원치료에 의한 사회복귀이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사전 선거운동 수단이다</li> <li>○ 주민들이 정말로 이전을 원하는지 여론조사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변소가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면서 안방으로 들어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li> <li>○ 직원들이 가기 싫어서 이전 안 하는 것 아니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돼 있다.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모두 병원이전이 선거공약이다</li> <li>○ 집값, 땅값 때문에 이전을 요구한다. 부동산업자들은 병원이 이전하면 땅값, 집값이 오르니까 이전하기 전에 사두라고 홍보한다.</li> <li>○ 주민들은 병원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li> <li>○ 고층아파트는 지역재개발을 통하여 건축 가능하며, 종곡1동도 4만여평의 재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먼저 온 후에 동네가 형성됐다. 정치적인 요구라 반대 한다</li> <li>○ 병원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지역개발이 가능하다</li> <li>○ 이전한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li> <li>○ 정신질환은 맑은 공기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치료하는 것이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값, 선거 때문에 이전 요구하는 거다.</li> <li>○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다. 버스나 택시를 타도 병원을 지나서 내린다</li> </ul>

### 3. 이전추진방법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이 못하는 일을 구의원이 어떻게 하나</li> <li>○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전지시 문서에 서명을 받아달라는 브로커도 있고, 주민들의 이전요구 서명만 받아달라는 브로커도 있었다</li> <li>○ 전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별로 없다</li> <li>○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서명도 받고 이전추진위원회 조찬 모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li> <li>○ 보건복지부장관을 움직여야 하는데 구의원은 힘이 없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국회의원과 이전문제 다시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있다</li> <li>○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1만2천명 정도 서명 받았다</li> <li>○ 내년 6월 선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전을 추진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나와서 다음 의회에서 관철시킬 생각이다</li> <li>○ 받아줄 곳 설득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하면 된다</li> <li>○ 구청장이나 의장에게 병원을 빨리 옮긴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지만 안 해준다</li> <li>○ 이전 가능성은 유치지역 주민 혜택에 달려 있다. 정신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한다</li> <li>○ 민간업체가 가능성 있는 후보지를 가져오면 의회 차원에서 방문해서협의할 생각이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의회 차원에서 이전대상 지역 의회를 설득해본 적은 없다</li> <li>○ 가평군 등 몇 군데가 유치 의사가 있는 것 같다</li> <li>○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주민 2만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li> <li>○ 이전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있다</li> <li>○ 이제 범구민이전추진대책위원회를 만든 단계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전의지가 없으면 주민궐기대회를 열 생각이다</li> <li>○ 구의원들이 경험이 없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이 부지물색 문제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 주민들 능력에 한계가 있다. 요구하는 것 말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은 서명받고 시위하는 것 말고 뾰족한 수단이 없다</li> <li>○ 민간공모 절차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면 사기사건의 재발은 막을 수 있다</li> <li>○ 국회의원에게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li> <li>○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요 공공기관 지방분산책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치료에 효과적인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물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모방식의 획기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li> <li>○ 보건복지부가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음을 공표해야 한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가 중랑구 신내동 그린벨트 10만평에 임대주택을 짓는데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1만5천평을 포함하려고 추진 중이다.</li> <li>○ 정신병원도 신내동으로 갈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노력을 안 한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요구 데모도 하겠지만 실효성엔 의문이다.</li> <li>○ 현재 2만여명 서명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청원할 예정이다</li> <li>○ 공모절차를 한 번 더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이 있다. A씨의 말처럼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된다.</li> <li>○ 이전지역 주민, 의회, 단체장을 움직이는 노력은 이전 공모하면 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다</li> <li>○ 국회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설득해서 재건축 방침을 바꿔야 한다</li> <li>○ 구의원들은 주민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에 불과하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4 이전촉구 결의대회 때 서명운동 시작해서 몇 만명 서명 받았다</li> <li>○ 보건복지부가 이전 공모절차를 다시 하지 못하면 이전계획이라도 발표해야 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야 된다</li> <li>○ 받아주는 데가 없다지만 이전대상 부지는 보건복지부가 찾아야지 주민이 어떻게 찾냐. 송파구에 땅 많다더라</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수림 의원 시절에 70~80% 이전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청이 힘을 써주지 않아 무산 되었다</li> <li>○ 구의원들만의 힘으로는 이전이 어렵다. 구청장이 더 힘이 있다.</li> <li>○ 보건복지부와 병원이 이전의지만 있다면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li> <li>○ 이전을 위한 공모추진 절차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li> <li>○ 받아 주는데가 없어서 이전이 안되면 국유지라도 가야한다.</li> <li>○ 재건축을 1년간 유예하고 재공모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 관내 긴고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다</li> <li>○ 지역 국회의원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활동이 없는 것 같다</li> <li>○ 병원에 의한 이전 공모제는 아는 바 없고, 재건축 정책으로 바뀐 사실도 전혀 모른다.</li> <li>○ 1년 더 이전 공모를 재추진해 보자는 얘기도 들어본 바 없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도 못하는데 주민이 무슨 힘이 있나</li> <li>○ 주민들이 이사가는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이제 못 믿겠다</li> <li>○ 그 동안은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li> <li>○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 공모방식의 장점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기업은 할 수 있다는 점이다</li> <li>○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씨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찾아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li> <li>○ 개인적인 만남보다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월14일의 이전추진 범구민대책위원회 결성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li> <li>○ 이전 후 병원부지 재개발 시공회사가 벌써 정해졌다는 소문도 있다</li> <li>○ 보건복지부는 가냐 안 가냐만 판단하면 된다. 이전 가능성 확인</li> </ul>

	은 조용히 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에 정신병원 유치지역 주민지원법안을 만들었다가 법제처가 모든 혐오시설에 일반화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li> <li>○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전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장관은 이전의지가 있는 것 같다.</li> <li>○ 실무자들이 병원 이전을 장관의 외압으로 인식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li> <li>○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하면 그들이 열심히 추진할 것이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먼저 이전부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li> <li>○ 보건복지부가 이전 의사를 밝히지 않으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된다</li> <li>○ 시위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이전의지를 보이게 해야 한다</li> <li>○ 종합병원으로 가면 어디든지 동의할 거다. 남양주 부지도 좋다</li> <li>○ 2003년 민간사업자 공모때는 정신병원만 가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다. 종합병원으로 가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움직이지 않는 당나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뾰족한 당근이 없고 채찍을 쓰기도 그렇다</li> </ul>

#### 4. 병원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싫은데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겠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li> <li>○ 용인에 부지가 있다고 조감도까지 가져온 사람도 있다</li> <li>○ 민간 사업자 제안 중에는 신빙성 있는 후보지도 있는 것 같다</li> <li>○ 병원이나 주민이나 이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게 문제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같은데 종합병원으로 포장해서 가면 받아줄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장관이 대체부지 있으면 가겠다고 해야 이전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할 것 아닌가</li> <li>○ 남양주시에서 유치에 동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정신병원 현황을 알아 봤는데 보건복지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씨가 남양주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믿지는 않는다</li> <li>○ 보건복지부가 병원 이전계획이 있다고 확인해줄 리가 없다</li> <li>○ A씨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업자가 여러 사람 바뀌었다</li> <li>○ 장흥도 돈까지 주고 주민동의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한 것이 오산이었다</li> <li>○ 이전지역 주민들은 설득할 수 있다. 전 시의원도 용인에서 정신병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근교에 오라는 지역이 있고 조건도 좋다. 알려주면 병원이 방해공작 할까봐 알려줄 수 없다</li> <li>○ 보건복지부가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병원 리모델링 용역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2005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재개하도록 했다</li> <li>○ 그래도 이전 후보지가 없어 이전이 불가능하면 현 위치에 리모델링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li> <li>○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사정을 묵살하고 이전계획이 없다거나, 이전 후보지가 있겠냐는 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li> <li>○ 보건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속개할 수 있다고 밝혀야 한다</li> <li>○ 유치지역의 주민,의회, 단체장이 동의해야 이전이 가능하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싫은데 다른 데는 좋아하겠냐</li> <li>○ 법원과 검찰이 송파구로 이전할 때 정신병원도 같이 가져가라고 했지만, 내가 송파구에 살면 정신병원이 오는 건 반대할 것이다</li> <li>○ 내가 환자가족 입장이라면 이전에 반대할 것이다</li> <li>○ 이전요구 서명 여러 번 했지만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자 이전공모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다른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li> <li>○ 이전추진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이전이 어려울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에는 이전할 데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전할 곳이 있는 것 같다</li> <li>○ 경기도 지역 단체장으로부터 받아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들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늦었다. 전에는 이전예산을 확보하여 이전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li> <li>○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li> <li>○ 병원이전은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에 의한 헛공약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씨로부터 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지역 주민은 좋다고 하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한다고 한다.</li> <li>○ 올해 이전 안되면 당분간 이전은 힘들 것이다</li> <li>○ 단기적으로 이전이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한다</li> <li>○ 정권 바뀌면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도 이전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이전을 희망하지만 어렵다고 본다</li> <li>○ 이전을 위한 공모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공모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병원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li> <li>○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li> <li>○ 병원이전은 정치인들의 헛공약이었다</li> <li>○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위헌 판정난 행정수도도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옮기는데 보건복지부의 재건축 방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된다, 된다 해서 믿었는데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약속하고 거짓말한다. 실제로 옮겨야 옮기거나보다 생각할 것이다</li> <li>○ 면담 협조요청 공문에 병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한 걸 보니 이전하지 않고 새롭게 단장(리모델링)하려는 것 같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힘이 없어서 못 옮기는 건지 이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바꾸고 노인 복지시설까지 추가하면 오라는 곳이 많다</li> <li>○ 종합병원 형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조건이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li> <li>○ 보건복지부가 이전부지를 찾는 것보다 민간사업 공모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li> <li>○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조건으로 유치의사가 있다. 주변 땅 주인들은 유치를 희망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익이 되면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li> <li>○ 장흥도 유치의사가 있는 것 같다</li> <li>○ 하남, 남양주, 가평 중 남양주가 유력한 것 같다.</li> <li>○ 보건복지부가 이전을 추진했을 때 솔로몬이라는 사기꾼이 한 구좌에 5백만원씩 분양했다가 구속된 사기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어서 다시 이전을 추진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평군이 이전에 적극적이라고 들었다</li> <li>○ 남양주는 교통이 편리한 도로 변에 4만평 부지가 있다고 들었다</li> <li>○ 국립정신병원은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다. 가평이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다</li> <li>○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남양주시장이 병원 유치의사가 있는 것 같다</li> <li>○ 병원은 이전에 부정적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투기 등 민원을 우려하는 것 같다</li> <li>○ 이전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생각이 그렇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이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근교에는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산골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다</li> <li>○ 남양주시는 놓고 있는 땅이 아주 많다. 내가 남양주 시장이라면 인센티브 많이 받아서 수용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붙여 보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 소각장도 혐오시설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측이 이전조건을 무리하게 제시한다. 부지 4~5만평은 무리한 요구다.</li> <li>○ 이전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조건만 제시한다</li> <li>○ 2003년 민간사업자 공모때도 무리한 조건 때문에 안 됐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li> <li>○ 주민들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li> <li>○ 그 동안에 재건축을 추진했다면 오히려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에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li> <li>○ 시간이 흐르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구 의원 등이 남양주시 부지를 얘기해서 조용히 조사해봤는데 이전부지로 적합하지 않았다</li> <li>○ 이전부지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곳이어야 한다</li> <li>○ 이전부지 공모를 한 번 더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해봐야 안 될 게 뻔하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넘게 이전을 추진해 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전계획이 없다</li> <li>○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부지는 현실성이 없다</li> <li>○ 가평군은 이전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으로 동네가 분열되기도 했지만 병원이 가평까지 갈 수는 없다. 서울 근교에 있어야 한다</li> <li>○ 광진구내에서 이전부지를 제공하면 이전이 가능하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역에 이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려운 것 같다</li> <li>○ 환자를 위해 이전하면 좋지만 서울을 떠날 수는 없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남양주, 하남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접대용 답변이지 진심이 아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선제도가 문제다. 시장.군수의 동의 얻기가 쉽지 않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병원으로 포장한다고 유치할 것 같지는 않다. 종합병원도 망하는 데가 많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부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li> <li>○ 정치인들의 이전요구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는 움직여야 선거공약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li> </ul>

## 5. 병원 부지 활용 방안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40~50층 올라가면 많이 발전한다</li> <li>○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옛날에는 80%였는데 이제는 60%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꼭 아파트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임대 아파트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li> <li>○ 서민을 내쫓고 잘사는 사람만 끌어들이는 뉴타운 개발에 반대한다</li> <li>○ 국유지이기 때문에 서민용 임대주택 개발이 바람직하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가 시급하다, 학교, 주거, 공공시설로 바뀌면 좋겠다</li> <li>○ 병원부지는 2종 주거지역이라 현재는 12층밖에 못 짓는다</li> <li>○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면 고층아파트도 가능하다</li> <li>○ 중량구는 건축규제를 많이 완화하는데 광진구는 용적을 규제가 너무 심하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업자의 이익과 광진구의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li> <li>○ 주민들은 공원을 원하지만 업자의 입장도 있으니까 아파트도 지어야 한다. 상가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아파트가 현실적인 대안이다</li> <li>○ 주민들도 뉴타운 계획에 찬성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li> <li>○ 뉴타운 들어오면 주민들도 이익이 많지만 아파트는 별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부지에 40~50층 아파트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찬성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할인점이 필요하다.</li> <li>○ 아파트는 반대한다.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나 공원 및 학교부지로 사용하면 좋겠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나 큰 상가입지를 희망하고 있다. 스타시티 개발방식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도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나, 초등학교 등이 필요하고, 뉴타운이 지정되었으면 좋겠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용 스포츠 센터, 학교, 아파트가 필요하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상복합아파트, 공원 등으로 활용하면 좋겠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상권형성에 도움될 것이다. 아파트나 학교가 입지하면 좋겠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은 고급 아파트를 원하고 학교도 급하다</li> <li>○ 스타시티도 3만평 중 6천평(시가 2천억원)을 기부채납해서 도로 확장과 구민회관(2천평)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용적율을 415%로 허용해 줬다</li> <li>○ 병원부지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은 400%, 주거지역은 200~250%로 용적율이 높아지고, 구가 요구하는 땅은 20%(2,800평) 정도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이전만으로 지역개발이 되는 건 아니다. 면목동 길을 확장해야 중곡1,3동 개발압력의 불씨가 될 수 있다.</li> <li>○ 동이로가 군사도로라서 주변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할인점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좋아한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 문화공간, 뉴타운으로 활용해야 한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타운 계획에는 부정적이다. 뉴타운 개발하면 서민들은 번두리로 밀려난다</li> <li>○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발전이다. 아파트가</li> </ul>

	<p>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공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타운 개발하면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빼주고 나면 뉴타운 아파트에 다시 입주할 형편이 못된다. 1천만 원짜리 시골집 1억원 준다고 부자되나?</li> <li>○ 뉴타운 개발로 이익보는 주민은 30%도 안 된다. 대부분의 주민이 세입자들이다.</li> <li>○ 뉴타운 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다. 이것 때문에 사기피해 사건도 있었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부지 1천6백 평 정도는 제공이 가능하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뉴타운 얘기가 많이 나온다</li> <li>○ 학교, 공원, 청소년수련관 얘기들이 많다</li> </ul>

## 6.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전추진위원회도 얘기하면 동의할 것이다</li> <li>○ 보건복지부와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이런 시도(갈등분석)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li> <li>○ 대화가 없으니까 유연비어가 돌고 억측이 구구하다</li> <li>○ 장관 면담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li> <li>○ 이전을 전제로 하면 보건복지부가 응하기 어려울테니까 국립서울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로 하면 된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선거 때까지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 후보들이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기하려고 한다</li> <li>○ 병원과 주민단체 대표들끼리 대화하도록 한 발 물러서 있기도 어렵다. 앞에 나가서 강하게 주장해야 할 입장이다</li> <li>○ 보건복지부장관의 결단이 중요하다. 병원장과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안 듣는다. 대화기구에 정치인들이 끼면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고 주민들은 한 마디도 못한다.</li> <li>○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 때문에 대화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li> <li>○ 보건복지부와 대화는 주민단체 대표들이 하는 게 낫다. 한 동에 5명 정도씩 하면 된다.</li> <li>○ 대화의 1단계는 주민단체 대표들끼리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2단계로 정치인들이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면 좋겠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및 병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채널이 있기를 바란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와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li> <li>○ 대화기구가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짜여진다면 정치적 상황에 매몰되어 다양한 의견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다</li> <li>○ 조속히 재건축 추진 정책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와 대화 희망하지만 주민들이 말발이 딸려 대등한 대화가 잘 안 될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들은 타협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이지만 주민들은 긍정적이다</li> <li>○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li> <li>○ 대화는 선거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li> <li>○ 정치인들이 지역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빠지는 대화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장이 현수막 몇 개 단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li> <li>○ 갈등영향분석팀이 주민대표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대화를 주선할 생각은 없는가.</li> <li>○ 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기획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한 번 만나서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 얘기했다가 집중공격 받았다</li> <li>○ 이전요구가 시위나 농성으로 관철되기는 어렵지만 협상결과가 재건축으로 나오면 난감하기 때문에 모두 나서지 말라고 얘기한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보다 주민단체 대표들이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이전의지가 없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타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이익이다</li> <li>○ 병원과 주민 간의 협상은 필요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다.</li> <li>○ 주민공청회 통해서 여론확인이 우선이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li> <li>○ 중곡1,2,3,4동별로 주민 공청회를 추진 중이다. 4월에 하려고 했는데 5월로 연기했다</li> <li>○ 장소는 성당이나 교회 등 중립적인 장소를 활용할 예정이다</li> <li>○ 이전추진위측과 충돌할 위험이 있지만 진지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이전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li> <li>○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가족들이 뭘 어떻게 하나</li> <li>○ 인터넷보다 마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요구 주민집회가 있으면 한 번 가서 호소하고 싶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문제는 그 동안 조심스러웠다</li> <li>○ 여건상 병원 재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형편이 아니었다.(갈등표출 우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는 재건축 계획을 공론화하지 않고 추진했다</li> <li>○ 재건축 예산을 확보한 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li> <li>○ 선거 때까지 병원이 생각하는 절충안(병원+지역=공존)을 홍보하고 설득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 구청 강당 빌려서 공청회도 생각해보고 있다</li> <li>○ 그 동안은 공청회하면 갈등이 확산될까 우려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갈등관리 시범과제로 선정되면서 공론화됐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볼 생각이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대화는 수용하기 곤란하다</li> <li>○ 주민들을 만나서 타협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li> <li>○ 전에는 정부의 정책에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다</li> <li>○ NGO(시민단체)같은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자로 나서면 좋겠다</li> <li>○ 병원의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 같다</li> <li>○ 보건복지부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건축 홍보팀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li> <li>○ 재건축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다</li> <li>○ 갈등영향분석팀이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값 생각만 하는 사람들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li> <li>○ 재건축을 전제로 양보 카드를 찾아볼 필요는 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과 주민 양측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li> <li>○ 병원은 안 나간다고만 하지 말고 주민 편의시설들을 제시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li> <li>○ 주민들도 나가라고만 하지 말고 병원이 끝까지 못 간다고 하면 대안을 협의해야 한다</li> <li>○ 서로 멀리서 돌팔매질만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만나야 뭐가 나올 거 아니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나 이진추진위원회가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li> <li>○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대화는 어려울 것 같다</li> </ul>



## 7.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li> <li>○ 갈 곳이 없어서 못 간다는데 죽일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 봐야지</li> <li>○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전을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타운과 병원의 공존은 불가능하다</li> <li>○ 선 공모 후 재건축에 개인적으로는 승복해야 한다고 본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검토하는 과감한 변신이 주민들의 재산권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li> <li>○ 제3의 대안도 병원이 잔류하는 상태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li> </ul>
이전추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과 정신병원을 같이 가져가면 유치할 곳이 많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보건 전문대학교로 하는 방법도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다. 병원 이전을 전제로 한 거다</li> <li>○ 산업단지, 연구단지처럼 단지로 지정해서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이러한 갈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안되면 포장을 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용도 편하고, 이미지도 바꾸고.</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서울병원이 현재와 같은 수용치료 중심에서 교육연구기능으로 전환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전추진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li> <li>○ 병원 재건축 계획은 지난 4월 구청장으로부터 처음 들었다.</li> <li>○ 보건복지부가 절대 이전계획이 없다면 뉴타운 등 이전효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국립서울병원을 종합병원화하는 것은 인근에 건국대병원과 한양</li> </ul>

	<p>대병원 및 아산, 삼성 병원이 있어서 수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종합 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는 없다.</p>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요구 서명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도 많다.</li> <li>○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될 것이다.</li> <li>○ 수용치료 병원에서 교육,연구 기능으로 전환은 부정적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과 주민편의시설(공원 등)은 공존하기 어렵다. 화양변전소도 지중화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이전이 어려우면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이 너무 노후되어 낙후지역 이미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li> <li>○ 병원의 진료기능을 교육,연구기능으로 변화하는 시도는 정신병원이 입지하고 있는 한 반대할 것이다</li> <li>○ 종합병원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인근에 종합병원이 많아 수요가 없을 것이다.</li> <li>○ 재건축한다면 주위 환경여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의 재건축 정책을 들어 본 바 없고, 들어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li> <li>○ 굳이 재건축한다면 복합시설로 기능하면 좋겠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꼭 안 간다고 못을 박으면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가는 것을 전제로 했다</li> <li>○ 꼭 재건축해야 한다면 동네 주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것인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지역발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li> <li>○ 정부가 하겠다면 국민이 막을 방법이 없다. 재건축을 하려면 한 60층 정도로 지어야 한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이 불가능하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20~30층 현대식 시설로 국립종합병원으로 하면 좋겠다.</li> <li>○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만 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li> <li>○ 치매노인 요양시설도 저렴한 비용으로 같이 운영하면 주민들이</li> </ul>

	<p>좋아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1동을 동일로변까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병원 용적율을 높여주면 좋겠다</li> <li>○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li> <li>○ 중곡동 재개발이 안 되는 건 병원 때문이 아니라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기 때문이고 추진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이 불가하다면 건물을 멋있게 짓고, 주변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일부는 강력 반대하겠지만 많은 주민들은 지지할 것이다.</li> <li>○ 종합병원 등 복합기능을 갖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li> <li>○ 중곡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li> </ul>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병원보다 종합병원이 낫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자 방식에 의한 이전 공모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시장.군수 유치 의향서는 몰라도 도지사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무리다. 구치소 이전사례도 비슷하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격리수용에서 재활복귀로 정신보건 정책을 바꿨다면 그런 내용과 당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보건복지부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놔두지 말았어야 했다. 왜 그냥 놔뒀는지 모르겠다</li> <li>○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간에도 갈등과 반목이 생긴다</li> <li>○ 국회의원이 뭐라든, 장관이 뭐라든 자신있게 그런 정책의 변화를 공개하고 재건축이 확고한 정책이라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li> <li>○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다. 환자만 보지 말고 주민도 보라</li> <li>○ 통원치료는 환자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신과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암센터, 치매병원 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의료시설로 발전해야 한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으로 현대식으로 지어서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정신과 진료기능을 넣으면 이미지 쇄신이 가능하다는 말에 공감한다</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는 병원을 받아주는 데가 있어도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li> <li>○ 그 동안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병원 내부 직원들의 반발 때문인 줄 알았다</li> <li>○ 보건복지부가 재건축 방침을 굳혔다면 주민편의시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li> <li>○ 중요한 건 여론이다. 지자체는 주민여론에 민감한데 보건복지부는 둔감하다.</li> <li>○ 국립서울병원을 보건복지부가 꼭 직영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에 맡기면 더 잘 할 수 있다. 정신병원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보라매병원도 민간위탁으로 바꾸니까 서비스가 훨씬 좋아졌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윈윈 대안이 필요하다</li> <li>○ 병원 현대화사업에 수백억원이 필요한데 돈 안들이고 현대화하려면 밖으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li> <li>○ 5개 국립정신병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li> <li>○ 광진구는 병원의 용적율을 완화해서 고층으로 짓도록 해주고, 병원은 2천평 정도 부지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중.고등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타협하는 방안도 있다</li> </ul>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재건축하면서 여유부지에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차선책이다.</li> <li>○ 병원이 응급의료체계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는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li> <li>○ 공무원의 권위주의가 갈등요인이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li> <li>○ 광진구가 병원 부지의 고도제한을 풀어주면서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병원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하면서 부지 6천여평을 기부받아</li> </ul>

	<p>도로를 확장하고 구민 문화회관을 신축한 스타시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립의료원을 정신병원과 통합해서 중곡동에 재건축하는 방안도 있다</li> <li>○ 종합병원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바로 옆에 건국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만 공공의료시설로 개방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위치에 종합병원 형태로 재건축하면 좋겠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암센터처럼 임상과 연구 두 축으로 가칭 "국립정신보건센터"를 검토 중이다. 국립 암센터에 3,800억원 썼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생각이 있다</li> <li>○ 정신병원을 혐오시설이 아니라 유치시설로 바꾸겠다. 아일랜드 수사들이 운영하는 정신병원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있다</li> <li>○ 폐쇄병동 505병상, 개방병동 245병상, 낮병동 210병상으로 폐쇄병상이 전체병상의 약 53%이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부지를 공모하여 1년 후에도 신청지역이 없으면 그때는 재건축에 승복하기로 주민과 합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li> <li>○ 신사협정이나 협약을 통해 공모해도 안 되면 재건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협상을 추진하도록 중재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li> <li>○ 유치 신청지역이 없으면 이전요구 여론도 한 풀 꺾일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재건축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li> <li>○ 재건축도 안 되면 현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수밖에 없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병원과 종합병원을 결합하는 형식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li> <li>○ 국립의료원도 이전부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까지 챙길 여유가 없을 것이다</li> <li>○ 주민들 자동차 있고 주변에 병의원도 많은데 굳이 종합병원 만들 필요 없다</li> <li>○ 현 위치에 정신병원과 국립의료원을 통합해서 건축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좁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부지로 1,600평 정도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강당을 신축해서 주민을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려고 한다</li> <li>○ 내과, 치과 등 일반진료 기능을 추가하고 잔디 축구장과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이다</li> <li>○ 주차장도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치매노인 병동을 신축해서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li> <li>○ 건물들의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꾸려고 한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은평병원 가보니까 외래 진료기능 수용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li> <li>○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 재건축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클 것 같다</li> <li>○ 아일랜드 수사들이 운영하는 광주 성요한병원은 알콜중독자 전문치료센터인데 호텔수준에다 신부들 월급은 2만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li> <li>○ 경기도 이천시의 안드레아 병원도 비슷한 모델이다</li> <li>○ 주민들이 이전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재건축 정책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병원보다 정신보건 연구.교육 기능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현재는 정신보건 연구.교육기관이 없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치과, 내과 등 일반진료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li> <li>○ 치매, 왕따 어린이와 가족 상담, 이혼상담 등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정신보건의 1차 예방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li> <li>○ 교육.연구기능은 그 다음이다. 정신질환자 입원비가 전체 의료비의 15% 정도 차지했는데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추진한 후에 입원율이 많이 떨어졌다</li> <li>○ 900병상에 의사가 28명은 역부족이다. 유능한 의사들은 모두 다른 데로 간다. 레지던트 끝나면 다 떠난다. 건강증진기금 1조6천억원은 이런데 써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원(4.7) 우울증 진단도 광진구민부터 먼저 해서 진료로 연결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 하와이는 호텔,슈퍼마켓이 주민들에게 할인해준다.관광수입의 일부를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연구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하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이 중곡동으로 가서 정신과 병상을 200~300병상 만들고 20~30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있다</li> <li>○ 난치성 환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니까 900병상씩 필요없다</li> <li>○ 국립정신병원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 응급환자도 안 받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 국립병원은 연구.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li> <li>○ 국립서울병원은 정신과 폐쇄 병동이 없기 때문에 급성 중첩질환자가 갈 수가 없다</li> <li>○ 지역주민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립은평병원은 은평구 중.고등학생들을 병원으로 데려와서 교육한다.</li> <li>○ 식당, 청소 용역 근로자들도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다.</li> </ul>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 갈 때 국립서울병원도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종합병원 형태로 서민 위한 의료시설로 가면 좋아할 것이다</li> <li>○ 노인 치매요양 시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li> <li>○ 현재 900병상을 300병상 정도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인력은 국립의료원으로 흡수하면 된다</li> <li>○ 정신병원 옆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부모들이 병원 이전을 요구할 것이다</li> <li>○ 국립정신병원의 관료주의, 서비스정신 부족부터 고쳐야 한다. 광주 성요한병원과 시립은평병원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여론을 조심하면서 어렵게 버티고 있다</li> <li>○ 병원의 일용직, 시간제 근로 등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수영장, 운동장 등 편의시설 제공도 필요하다</li> <li>○ 갈 데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민들과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 전문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다시 한 번 하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공모지역이 없으면 재건축에 승복하겠다</li>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전 희망지역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유치희망 지역이 정말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li> <li>○ 이전부지 공모기간이 끝났어도 유치 희망지역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야 한다. 연말까지 확인 가능하다</li> <li>○ 공모든 뭐든 보건복지부가 이전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찾으려 된다</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땅값이다. 병원부지 일부 제공 정도로는 합의하기 어렵다. 이전요구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li> <li>○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병원을 포함한 중곡3동 전체에 대한 재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li> </ul>



[부록 8] 면담한 이해관계자 명단 (가나다 순)

면담자	주소
강준건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권정화	서울시 은평구 응암2동
김광일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김분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김윤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김현술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김환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나병창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남궁기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류해규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문경서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박종수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서덕원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서동우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서명현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송명금외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송웅달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신용탁	서울시 광진구 중곡 4동
양 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오재천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유승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윤경희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윤중근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이갑용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이강일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이문용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이선해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이승율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이영준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이은복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이종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이태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이형우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인병호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이문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임춘식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장동원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전병목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전태연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정경덕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조남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조남식	서울시 광진구 노유1동
천기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천준길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추윤구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